

회
고
록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후편)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삼열 _한국 기독교 사회발전 협회 이사장

동아일보 광고와 해직기자 돕기

1975년 초에 들어서면서 국내의 민주화운동은 학생운동뿐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문학계 등 시민사회로 확산되어갔다. 장준하 선생의 개헌 청원운동이 긴급조치로 억압되었지만,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요기도회가 기독교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함석헌 선생, 이병린 변호사가 대표하는 '민주회복국민회의'가 여러 지방에까지 확대 조직되었다.

유신체제 철폐와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각계로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들의 지지를 묻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정보부의 감시하에 강요되는 국민투표가 독재체제 강화에 악용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인사들은 국민투표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

었다. 김대중, 함석헌, 윤보선, 김수환 등의 이름으로 발표된 국민투표 반대 선언문이 해외에도 나와, 미국과 독일에 있는 민주운동단체들이 교포들에게 알리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정권은 2월 12일에 긴급히 영터리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73% 국민이 유신체제를 지지했다고 선언해버렸다.

긴급조치와 구속, 고문, 협박으로도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운동들을 막지 못하게 되자, 박 정권은 이를 보도하는 신문과 방송을 노골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방송국 기자 180명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기관에서 언론자유와 보도통제 반대 선언을 하자 정보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는 더욱 악랄하게 진행되었다.

1974년 12월 말부터 동아일보에 기업체들이 내는 광고를 철수시켜 재정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광고란을 백지로 둔 채 인쇄된 동아일보가 1975년 초부터 배포되기 시작하자, 국내외로 격려 광고 신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월 10일경부터 동아일보에는 언론자유를 옹호하며 투쟁하는 기자들과 광고탄압에도 백지광고를 내며 버티는 동아일보사를 격려하고 후원하는 격려 광고가, 각계각층의 개인, 단체들의 이름으로 게재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감동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많은 격려 광고가 실리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이하 민건회)’에서도 재빨리 동아일보를 돕는 운동을 전개했다. 1월 15일 자로 “민주언론 성원운동을 벌입시다.”라는

호소문을 인쇄해 독일 안의 교포들과 교회, 각 단체들에 수백 부를 배포했다.

이런 호소문이 배포되면서 서독 안의 여러 개인들이 동아일보에 성금을 보내고 격려 광고를 실었다. 민건회는 2월 14~1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인 의장단 회의에서 우선 500마르크를 선불해 동아일보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 나는 아래와 같은 격려 광고문을 만들어 런던에 있는 동아일보 지국의 박권상 특과원에게 500마르크 수표와 함께 보냈다.

언론자유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과감히 투쟁하는 동아일보에 정의와 찬사를 보내며 조국 땅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함께 뭉친 서독의 노동자 유학생 기독교인들의 격려와 동지애를 보냅니다.

1975년 2월 17일

재서독 민주사회건설협의회

고문: 윤이상, 장성환, 이영빈, 안석교

의장단: 송두율, 오대석, 이삼열, 강돈구

박권상 특과원은 2월 22일 자 편지로 동아일보에 케이블로 어음을 보냈으며 24일 자 신문에 게재된다고 알려왔다. 며칠 뒤엔 친필로 쓴 영수증과 함께 감사장과 메달도 보내왔다. 편지에 이렇게 썼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동아가 건투하고 있고 오늘의 민주운동 대열이

동아 없이는 확장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걱정됩니다. 보시다시피 동아 지면 제작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격려 광고는 낫는데 케이블 수급 과정에서 두 분의 이름이 빠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게재된 신문을 보았더니 내가 보낸 이름에서 윤이상, 오대석 두 분의 이름이 빠진 채 3단 광고문이 실렸다. 광고문도 검열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건회의 격려 광고 이외에도 독일 안의 여러 교민들이 성금과 격려 광고를 보냈다. 튀빙겐에서 600마르크, 두이스부르크에서 1,000마르크가 모여 동아일보에 송금되었다.

3월 4일 자 동아일보엔 서독 함부르크에 있는 한인교회(이재형 목사)가 2월 한 달 동안 동아 돕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3,000마르크(63만 원)를 모아 동아일보에 송금했다고 함부르크 대학의 오명호 씨가 전해왔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중엔 어느 간호원 한 분이 1,000마르크를 이름 없이 보내왔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렇게 열화 같은 성원과 격려가 있었지만 동아일보는 정부와 정보부의 탄압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굴복했다. 기자들이 쓴 기사를 편집국 안에서 삭제, 왜곡, 불게재하는 정보부 감시원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여기에 항의, 제작거부로 맞선 기자들은 해고되었으며, 3월 12일경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수십 명의 기자들을 일시에 무더기로 해고시켰다.

해고된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3월 21일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동으로 부당해고를 비판하고 자유언론과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지만, 해직기자 백수십 명은 복직되지 않았고, 영구히 신문사에

서 쫓겨났으며, 신문은 어용 주필과 편집국장에 의해 완전히 정보부가 시키는 대로 보도하는 언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는 해직 기자들의 생존이 문제였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 위원회에서는 구속 학생들과 종교인들의 가족과 함께 해직 기자들을 돕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나에게도 여러 독일교회를 통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나는 독일교회 선교부의 친한 목사님들을 통해 독일 개신교의 개발협력처와 “세상을 위한 빵(Bread for the world)”에 요청서를 보내 적지 않은 지원금을 보내는 일을 해야만 했다. 민건회 베를린 지역 협의회에서는 따로 성명서를 내고 동아 해임기자 돕기 운동을 전개하며 성금 모집을 하기도 했다.

점점 무자비하게 악랄해지는 독재정권의 만행을 보면서 장기화될 것 같은 유신 독재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해외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건회 의장단과 간부회의에서는 투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회원들의 이론적 무장과 한국 현실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원의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고 광부나 간호원으로 온 노동자들도 대졸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건회는 수준 높은 학술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1975년 3월 20~23일 프랑크푸르트의 유스호스텔(Haus der Jugend)에서 “근대화의 방향과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서독 내의 14개 지역 협의회에서 온 50여 명의 회원과, 회원이 아닌 유학생들이 모여 “① 근대화의 유형에 관한 재고(송두울), ② 한국 경제성장

의 오늘과 내일(이창균), ③ 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박대원), ④ 유교사상과 사회 개혁(송영배) 등 네 가지 발표를 각기 전공 분야를 연구하는 회원들에게서 듣고 한국 현실의 구조적 파악과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과 체제 개혁의 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의 내용은 대체로 박 정권이 해온 근대화의 방향은 주체성이 없고, 대외 예속적이며, 사회구조의 모순을 격화시켰고, 노동자와 농민, 영세시민들을 소외시켰으며, 결국은 독재체제를 불러왔다는 것과,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의 방향은 국민의 80% 이상에 달하는 저소득층 근로대중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옹호하며 외세의 간섭과 방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민건회의 여러 지역협의회는 활동보고를 들었으며, 재독 한인 노동자인 간호원, 광부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민건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도 했다. 교포들의 민주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 독일사회 안에서의 한국문제 여론화 작업 등에 관한 진지한 의견교환과 토론도 있었다. 학술대회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기관지 『광장』 4호에 요약 게재했다.

인혁당 8명 사형과 프랑크푸르트 데모

그런데 1975년 4월 9일 새벽에 인혁당으로 재판받은 8인이 대법원 판결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4년 4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데모의 배후 조종자로 구속된 여정남, 도예중 등 무고한 이들이

정부 전복기도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법재판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가족 면회도 없이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해버린 것이다. 독일 신문들도 고문과 자백에 의한 부당한 재판이었다는 것, 박 정권이 학생 데모를 막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만들려고 무리한 사형 집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나는 9일 새벽 이 뉴스를 듣고 너무 분개하여, 민건회 의장단과 긴급히 전화로 의논해서, 당장 비판 성명서를 쓰고, 데모와 쫓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장단 회의나 집행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이 두 주일 뒤인 4월 26일 프랑크푸르트에 모여 박 정권 규탄 데모와 민주회복 쫓기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건회원들은 분개해서 참을 수 없다고 모두 찬동했다. 마침 4월 19일이 4.19혁명 15주년의 날이기 때문에, 4월 민주학생 혁명을 기념하면서 독일 교포들을 모아 큰 데모를 준비하도록 했다. 임원들과 프랑크푸르트의 회원들이 긴급히 모여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 맡았고, 두 주일 안에 큰 대회와 데모의 준비를 마치게 했다.

우선 쫓기대회 장소와 데모 신고, 마이크와 자동차 인쇄물 등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임희길, 이준모가 맡고, 현수막 플래카드는 김길순, 오대석이, ‘빠라’를 만들어 뿌리는 작업은 이지, 송영배가, 진행은 강돈구, 박대원이 맡기로 하고, 배정석이 서독 수상에게 보내는 편지를 독문으로 쓰고, 나는 우선 교포들을 동원할 호소문을 쓰기로 했다. 며칠 고심한 뒤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써서 인쇄에 부쳤다.

민주회복 결기대회를 개최하며

재독 한인 교포 여러분!

줄기찬 민중의 항거와 민주회복운동을 악랄하게 짓밟아온 박정희 독재자는 다시금 폭군의 칼을 뽑아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의 비밀군사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소위 인혁당 관계 인사 여덟 사람이, 처벌의 근거였던 긴급조치 4호가 이미 철회되고, 대부분의 수감 인사들이 석방된, 지난 4월 9일 아침 억울하게도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자가 터져 나온 혹독한 고문으로 강제자백을 받은 것밖엔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학생들과 대질심문을 해달라는 증인신청도 기각해 버린 채, 방청도 허락되지 않은 엉터리 재판에서 이들은 무고하게 사법살인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밀군사재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꾸민 이 연극을, 인간이라면 차마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연출하지는 못하리라고 믿어 왔습니다.

정말 이들이 불온사상을 가지고 정부 전복 음모를 꾸몄다면 왜 이 사건을 공개재판을 통해 떼땀이 보이지 않고 처형하고 말았겠습니까? 이 천인공노할 독재자의 범죄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준엄하게 다스려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중략)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광장에 모여 민주회복의 함성을 지르고, 국내외의 제 민주단체들의 총력을 호소하며, 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마하는 학문도, 우리의 노동기술도, 민주사회와 민족주체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조국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음이 분명한 이상, 학생

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도 없고, 종교인은 성소에만 파묻혀 있을 수도 없으며, 근로자는 직장노동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재독 한인 근로자, 학생, 종교인 여러분!

4월 혁명 15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당면한 위기를 남의 일처럼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어, 우리는 다시 민주회복의 봉화를 들며 쫓기하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동포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들 모두의 광장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혁명 15주년의 날에

민주사회 건설 협의회

고문단 안석교, 윤이상, 이영빈, 장성환

의장단 송두울, 오대석, 이삼열, 강돈구

드디어 4월 26일(토) 13시.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바울교회(Pauls Kirche) 앞 광장에는 서독 각지에서 우리 호소문을 읽고 모여든 교포들이 150여 명이나 되었고 독일인들도 100여 명 운집했다. 바울 교회 앞 광장은 프랑크푸르트의 시청 근처 중심가에 있는 넓은 광장으로 독일에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1848년 민주 혁명이 일어났던 유명한 역사적 명소이다.

쫓기대회는 애국가 제창에 이어, 4.19 희생자와 사형 집행된 민주인사, 할복자살한 김상진 열사 등을 위한 묵념을 드렸고 개회사(송두울), 사월 혁명 기념사(김길순), 민주회복 쫓기사(박영은)에 이어 고국 동포에

보내는 격려문이 “민주 청년·학생들에게”(박대원), “민주회복 국민회의에”(오대석)가 낭독되었으며 윤이상 교수의 선창으로 사월 혁명 만세, 민주사회 만세, 민족통일 만세의 삼창이 있던 후 시가행진으로 들어갔다.

미리 준비한 구호와 플래카드, “4월 혁명 정신으로 민주회복 쟁취하자” “7년 징역 받더라도 병어리론 못 살겠다” “박 독재 타도하고 민주사회 건설하자” “정보부원 몰아내자” 등을 들고 데모 행진을 하며 1만여장의 규탄 성명서를 가두에서 배포했다.

오후 3시경 250여 명의 데모대는 중심가를 거쳐 쇼핑객들이 붐비는 백화점가의 콘스타블라박흐(Konstablauache) 광장에 도착해, 많은 독일 시민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박 정권 성토대회를 열었다. 민건회원인 이지, 이보영, 김균진, 이삼열이 마이크를 잡고 규탄 연설을 했고, 서독 수상 헬무트 슈미트(Schmidt)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낭독(강돈구)되었다. 민건회는 이 서한에서 국외에서의 민주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7년 징역 형벌이 독일에 있는 민주 인사들에게 작용되지 못하도록 서독 정부가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과, 독일 안에서의 한국 정보부 활동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날의 데모와 쫓기대회를 서독의 텔레비전 HR, WDR 등이 보도했고, 쥐드도이치 자이퉁(Stüddeutsche Zeitung)과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 Rundschau) 일간지가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다. 나는 자세한 보도 기사를 써서 런던의 박권상 동아일보 특파원에게 보냈는데, 박 특파원은 동아일보 5월 2일 자 7면에 “재독 한인 150여 명 민주회복 쫓기대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주었다.

나는 특히 집을 자주 비우고 여행만 다닌다고 불평하는 두 아이들에게, 이번 데모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더니 일곱 살짜리 아들 민형이와 여덟 살 지형이가 자기들도 피켓 들고 나가 함께 데모하겠다고 했다. 구호를 쓰라고 했더니 “Kinder wollen auch Demokratie(아이들도 민주주의 원한다),” “Ich will kein Mörder President(나는 살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라고 독일어로 써서 들고 데모 행진의 맨 앞에 서서 걸어갔는데 다음날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일간지가 전면 게재하면서 아이들 사진을 크게 실었다.

1974년 3.1절 데모 시엔 교포들이 무서워 50여 명만 참여했는데, 1975년 4.19데모엔 세 배나 많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민건회 간부들의 자체 평가에선 이제 서독에서의 민주화운동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고 대중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발쭌(Walsum) 광산 광부들의 정보부 공작 폭로

1975년 3월 20~23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인 민건회 학술토론회 시에 북쪽 루르지방에서 온 회원(광산근로자)들로부터 발쭌(Walsum) 광산의 한국인 광부들이 정보요원들(Spitzel)의 협박과 감시 때문에 몹시 괴롭힘을 당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발쭌 광산 기숙사의 통역인 이봉용 등이 장성환 목사의 교회에 나가는 광부들에게 빨갱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하며, “귀국 조치를 당한다”느니 “대사관에 보

고한다”는 등 겁을 주어 주일날 교회에도 못 나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1974년 삼일절 본 데모 이후 민건회 활동에 참여하고 선언문에 서명한 장성환 목사(뒤스부르크), 정하은 목사(베를린), 이화선 목사(프랑크푸르트), 이재형 목사(함부르크) 등이 담임하는 교회에 대해 대사관과 정보부에서 빨갱이 교회로 몰며, 교인들에게 못 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1974년부터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공작과 방해로 당해보진 처음이었다. 그동안 김성수, 오석근, 이화선 목사 등이 테러와 협박을 당해 경찰에 고발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까지 정보요원을 보내 설교 등 정부비관 활동을 탐지하여 대사관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을 협박하여 교회에도 못 나가게 하는 무법적인 공작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 민건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3월 22일(토) 오후 종합토의 시간에 발췌 광산 사태와 한국 노동자들(간호원, 광부)의 권익옹호문제에 관해 장시간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자세한 보고와 토론 끝에, 발췌 광산 문제는 일부 광부들의 인권탄압이나 장성환 목사의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를 국내에서뿐 아니라, 독일과 같은 민주 법치사회에서까지 자행하는 독재정권과 정보부의 만행으로서, 민건회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① 진상 조사단을 보내 구체적 파악과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 ② 광산 측 기업주와 협상해 정보활동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③ 피해를 입은 광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임 변호사를

위촉해 법적인 보호활동을 추진할 것 ④ 독일교회와 노조, 언론에 알려서 재발을 막도록 할 것 ⑤ 격려 편지와 위문 방문을 통해 어려운 광부들을 위로할 것 등을 결정했다. 대책위원으로는 이삼열, 박대원, 배동인, 이영준 등을 선정하였다.

민건회 조사단은 3월 28~29일 뒤스부르크에서 민건회 의장단, 루르 지역 협의회원, 장성환 목사 및 피해를 입은 광산근로자 여러 명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케틀러 하임의 자치회(회장, 강무의)는 회사 사장에게 탄원서를 내도록 하고, 장성환 목사는 종교탄압의 시정을 위해 독일교회(EKD)에 호소하며, 민건회는 이를 노동조합, 정당 및 언론기관에 알려져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근로자들의 숙소와 직장에서 정보활동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런 사실이 독일 사회에 알려지면 분명히 한국인의 수치가 되겠지만, 이렇게 굵은 상처는 보자기를 씌워 감춘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또 이를 통해 한국인의 민주의식과 용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은 했지만 일이 보통일이 아니었다. 100여 명 한국 광부들이 모여 살고 일하는 발췌 광산의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전 독일 사회와 종교계에 폭로했을 때 생길 문제들을 수습하는 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탄원서를 쓰고 독일어로 번역해 공개서한을 보내고, 언론계에 알려 보도하려면 여러 인력이 필요한데, 유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광부들

은 독일어가 안 되고 문서작업을 할 장소도 없었다. 결국은 한인 교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장성한 목사와 독일어 편지를 쓸 수 있는 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뒤스부르크의 장성한 목사 댁에 한 달 이상을 머물며 발췌 광산의 노동자들과 만나 대책을 협의하고, 탄원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독일어로 번역해서 각계에 보내는 일을 맡아 수행해야 했다. 나는 우선 자치회장인 강무의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정보활동의 증인이 된다는 최병근 씨, 그리고 이곳의 4명 통역 중에 정보활동을 지휘했다는 이봉용 이외에 다른 두 통역인 김윤수, 이종성도 만나보았다. 요지는 통역 이봉용의 지시로 광부 몇 사람이 뒤스부르크 교회에 나와 장목사의 정부 발언 설교를 기록하여 대사관에 보고하는 첩자(Spitzel) 노릇을 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빨갱이 교회로 몰아 광부들이 교회에 못가도록 협박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역할을 하던 최병근이 자치회장 강무의에게 와서 폭로하고, 설교 기록장 등 증거물을 가져와 통역 이봉용에게 항의했으나, 같은 첩자 노릇을 하던 정병호 등 여럿이 폭로한 자들을 때리고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자치회장 강무의는 통역 이봉용에게 여러 번 항의했으나 답변을 피해서, 드디어 자치회를 열어 광산의 슈나이더 부장에게 탄원서를 보내겠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케틀러 하임의 한국 근로자 70명 중 40여 명이 참석해 통역 이봉용의 부당한 탄압과 감시행위를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첩자노릇을 강요받고, 뒤스부르크 교

회에 가서 설교와 반정부 발언을 기록해 둔 노트까지 복사해서 보관했다.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되어 정보원들로부터 얻어맞고 협박을 받은 여러 광부들에게 자필로 증언을 쓰게 해 첩해두었다. 협박 내용은 “빨갱이 교회를 다니면 귀국해서 감옥 간다,” “이 사실 폭로하면 죽여 버리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총까지 만지작거리며 위협했다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이 증거물과 기록들을 토대로 발췌 광산의 한국 근로자 감독책임자인 슈나이더 씨 앞으로 보내는 자치회장 이름의 공개서한을 초안해서 강무의에게 주어 동의를 받았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각계에 보내는 일을 장성환 목사, 임영희 사모와 함께 해야만 했다. 1975년 4월 3일 자로 쓰인 4페이지의 공개서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슈나이더 인사부장님!

우리들 발췌 광산의 케틀러 하임에 거주하는 한국 광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생활 분위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들에 대하여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서독 안의 한국인들에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 탄원서를 준 공개서한의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췌 광산에는 4명의 통역을 포함하여 152명의 한국인 광부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중 70명은 케틀러 하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임에는 이봉용 통역이 2월 초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불법적인 정보 집단

을 조직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여, 동료들에게 협박 공갈을 가하는 등 우리 자유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봉용은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우리들이 한국 사회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감시하며, 심지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종교의 자유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의 기본권과 자유민주 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중상모략하면서 우리들에게 조작된 공포와 불안한 생활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중략)

이봉용과 그 하수인들은 장성환 목사가 공산주의자며, 그의 교회에 나가는 것은 공산주의자와 연합하는 것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임에서는 독일에 온 지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감히 두이스부르크 교회 예배에 참석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 교회가 불온문서를 발행하며, 교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있고, 그 자금출처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에 못 나가게 하면서 정병호와 안상국은 두이스부르크 한인교회에 매주일 나갔습니다. 이상해서 물으니, “몰라서 묻느냐? 정보를 수집하러 간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봉용의 첩자로 교회에 나가 장성환 목사의 설교를 적어다 여기에 가필을 해서 본(Bonn)의 한국대사관으로 보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알려져 지난 3월 8일 자치회를 소집하고 하임 안에서의 정보활동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허위조작과 협박행위가 폭로되자 이들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폭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잔인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정보조직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사의 노동자로서 독일에 사는 동안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자유들이 보장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아가 독일과 한국에 있는 모든 민주시민들에게,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게 노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케틀러 하임 한인 자치회장 강무의 외 일동

사본 배부처

- 1) 주서독 한국대사관 진필식 대사
- 2) 재독한인교회 목회자 대표 장성환 목사
- 3) 루르지구 발쭈 광산 노동조합

이 공개서한을 첨부해서 장성환 목사는 4월 8일 자로 독일교회 외무총장 헬드(Held) 박사와 사회봉사국 총재 쇼머(Schober) 박사, 한국교회협의회(KNCC) 김관석 총무를 수신자로 하는 호소문 편지를 작성해 독일교회 관계요로에 보냈다. 요지는 한국 노동자들이 교회 예배에 나올 자유마저 억압당하고, 교역자와 교인들을 공산당으로 몰며, 재독 한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독일교회와 정부가 합법적인 보호조치를 해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장 목사는 디슬라켄에서 광산촌을 방문해 한국 광부들을 만나려 했으나 광부들 기숙사의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막은 경험까지 편지에 썼다.

역시 같은 날짜에 민건회(Forum für Demokratie in Korea) 이름으로 독일의 노동조합과 정당, 전국 대학생연합회, 언론기관들에게 보내는 공개 호소문이 발표되고 우송되었다. 발췌 광산의 한국 광부들의 공개서한을 첨부해, 이들의 인권과 종교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보활동을 조장하는 한국대사관과 발췌 광산 사장에게 항의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이들 공개서한이 각계에 발송된 후 엄청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독일 신문들이 4월 10일경부터 큰 제목을 뽑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첩자들이 광산에서 활동”(Rheinische Post 1975년 4월 10일), “한국인 간호원 광부들 다시 정보 첩자에 공포”(Frankfurter Rundschau, 1975년 4월 11일), “한국 정보부 첩자들이 공산당 사냥?”(Neue Ruhr Zeitung 4월 16일), “한국인 목사를 정보부 첩자가 감시”(WAZ 4월 11일). 독일의 언론보도는 조그만 지방신문에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발췌 광산의 탄광회사와 한국대사관은 연일 기자들의 전화와 질문공세로 몹시 당황했다.

수십 가지 독일 신문과 잡지 방송에 보도된 발췌 광산의 정보부 활동 내용들은 독일의 전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거의 모든 기사에는 1967년 한국 중앙정보부가 17명의 한국 유학생들을 독일에서 납치해 갔다는 동백림 사건을 기억시키며, 독일 땅에 다시 들어온 한국 정보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많은 종교인 학생 언론인을 정보부(KCIA)가 무자비한 고문과 협박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도 곁들여 보도했다.

이렇게 대대적인 언론의 보도는 발췌 광산 사태를 전 독일의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등장시켰다. 광부들의 공개서한과 장 목사의 호소문, 민

건회의 성명서가 대량으로 뿌러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동조 격려 서한, 항의 성명, 조사요구가 많은 독일 시민들과 여러 기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누구보다도 장성환 목사와 한인 교회를 보호하는 독일교회의 외무총장 헬드 박사가 한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실무담당 유르겐 므쉬(Jürgen Miksch) 목사가 발췌 광산 본부와 한인 교회를 조사 목적으로 방문했다. 독일 노동조합(DGW)과 사회민주당의 청년단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조사에 나섰다.

몹시 곤혹스러워진 한국대사관에서는 4월 12일 임정삼 노무관을 급히 발췌 광산의 광부들 숙소로 보내 무마작전을 시도했다. 통역들을 앞세워 광부들을 집합시키고, 공개서한의 내용을 따지며 광부들의 불평과 항의를 들었다. 그러나 신문기자들을 따로 만나서는 정보활동이 없었으며 장 목사 교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이야기만 들었다고 했다. 4월 14일 자 일부 지방신문은 임 노무관의 말을 인용해 그렇게 보도했다.

나는 4월 15일 오후 3시에 장 목사 댁으로 10여 명의 지방신문 기자들을 불러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시 했다. 정보활동의 증인이 되는 광부 7명을 참석시켜 대사관 임 노무관의 변명과 왜곡을 다시 비판했다. 대사관과 민건회의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되었다. 대사관은 전독 한인회(회장 임정평)를 동원해 민주화운동을 비난하며, 주동자들이 위험한 극좌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게 했다(1975년 4월 27일 자로 독일교회로 보냄).

또한 진필식 대사는 임정삼 노무관을 시켜 독일교회 외무총장 헬드 박사에게 답변서를 보냈다(1975년 4월 24일 자). 그는 여기서 한국대사관이

정보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장성환 목사를 공산당이라고 한 적도 없고, 장 목사 교회에 못나가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장 목사와 민건회가 대사관의 정보활동을 비난한 것을 사과하든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독일 언론에서 증인들의 폭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마당에 대사관과 한인회의 부인은 먹혀들지 못했다.

이런 공방전이 오가는 사이 광부들 사이에선 폭력과 구타행위가 벌어졌다. 함께 첩자행위를 했다는 정병호가 이를 폭로한 최병근을 5월 6일에 일터에 가면서 만나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며 심하게 구타했다. 피를 흘리도록 맞은 최병근은 다음날(5월 7일) 현장을 본 증인 두 명을 데리고 노조에 가서 고발했는데 5월 9일 아침 두 사람은 슈나이더 인사부장에게 불러갔다. 놀랍게도 슈나이더는 가해자인 정병호와 피해자인 최병근 둘 다 폭력행위를 했으니 오늘 날짜로 해고한다고 하면서, 비행기표를 사줄 테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청천병력 같은 해고 통보를 했다.

이 보고를 듣고 우리는 광산과 정보부 측이 첩보활동을 자백한 핵심 증인(kronzeuge)을 추방해버리려고 짠 계략임을 알게 되었고, 최병근의 강제추방을 막을 조치를 긴급히 취해야 했다. 우선 이 사실을 지방신문들에게 보도하도록 했고, 신문들은 간첩활동의 핵심 증인을 추방한다는 보도를 냈다. 여러 곳에서 “폭력행위를 경찰에 조사시키지 않고 피해자를 추방하려고 했다”고 슈나이더 인사부장의 부당 조치를 비난하는 신문보도가 나왔다(1975년 5월 10일 WAZ신문). 독일교회 사회선교부(Innere Mission)에서도 독일노동조합(DGW)에다 최병근의 체류를 허가하고 해고

를 취소하도록 기업주에게 조치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국제엠네스티에서도 최병근을 추방하면 한국에서 정치범으로 구속될 위험이 있다고 성명을 내고 인신보호를 요청했다.

최병근의 구타와 해고 추방결정은 오히려 발췌 광산의 정보원과 첩보활동을 확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억울한 소식을 들은 광부들이 최병근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슈나이더 인사부장에게 보냈고, 이 탄원서(독문 번역본)를 신문사와 관계 요로에 보내 첩보활동의 확실한 증인을 추방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 5월 12일 자로 발췌 광산의 한국 근로자 145명 중 127명이 친필로 서명해서 보낸 탄원서는 이렇게 썼다.

존경하는 슈나이더 인사부장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동료 최병근 씨를 정보활동을 해온 정병호 씨와 함께 싸웠다는 이유로 5월 9일 자로 해고하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부당하게 편파적인 처사에 분개하여 탄원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경위 설명 중략)

우리 단순한 근로자들은 공포와 불안 없이 자유롭게 노동하게 되기를 바랄 뿐, 친절부니 반정부니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는 관계없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단지 하임 안에서의 부당한 감시와 간섭, 그리고 협박행위를 몰아내려고 할 따름입니다. 정보활동과 협박, 폭력행위를 한 자들은 법대로 조사해서 처벌해

주시고 이를 고발한 선량하고 용감한 우리의 친구 최병근을 해고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만일 또 누가 폭행을 당하고 납치되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

Walsum 광산 근로자 일동

이 공개서한은 해당관청과 언론기관에 송부될 것입니다.
5월 11일 23시까지 한국인 근로자 145명 중 127명이 서명했음.

이 탄원서의 내용이 지방신문들에 보도되자 광산 측 슈나이더 부장은 손을 들었다. 5월 14일 자 여러 신문엔 “최 증인 해고 철회, 광산에 계속 근무”라는 보도가 크게 실렸다. 그 대신 광산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다. 독일교회 사회선교부에선 변호사를 선정해 최병근의 망명신청을 도와주기로 했고, 독일 형사검찰 14팀에서 발췌 광산의 폭력과 정보활동을 조사하겠다는 보도도 실렸다(5월 14일 자 *NRZ*와 *WAZ*, *Rheinische Post*).

발췌 광산 사태는 결국 우리 측 승리로 매듭지어졌지만 양측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증인 최병근은 복직되었지만, 더 힘든 다른 광산으로 보내 경사진 채탄 막장에서 일하게 했다. 자치회장 강무의와 강범식 등 탄원서를 썼던 주동자들에게 계속 압력이 행해졌고, 화가 난 발췌 광산에서는 문제된 통역 자리를 없애버려 우리를 돕던 김윤수, 이종성 통역이 해고되었다. 이종성은 체류허가마저 거부되어 우리는 앰네스티와 독

일교회의 도움을 받아 망명(Asyl)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 여론의 못매를 맞은 한국 대사관은 초상집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7월 중에 진필식 대사는 책임을 물어 해임되었고, 정보부 파견으로 왔던 군부 장성출신의 이종욱 공사는 전직발령을 받았고, 김준호 공보관장, 한영택 정보원과 영사 한 명이 인사이동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난리가 나니까 6월경에 남산본부(중앙정보부)에서 조사단이 나와 주독대사관을 파헤쳤는데 그 여파로 회의 도중에 직원들 사이에 주먹 소동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독일사회와 정부를 향한 반독재 여론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의 독재정치를 비판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목적은, 우선 재독 한국 교민들에게 민주의식을 심어주고 반독재 전선에 나서게 함으로써 국내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강화시키자는 데 있으며, 또한 독일의 여론을 독재 비판 쪽으로 전환시키고, 외교정책을 통해 비판과 압력을 가해 국내민주화를 촉진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두 가지 과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이 아니고, 대부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계약 노동자인 간호원 8,000여 명과 광부 3,000여 명, 그 밖에 유학생과 사상직원 1,000여 명 정도로 1만 2,000여 명에 불과하다. 1970년대에 독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인 몇 십 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독일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빈약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다. 간호원, 광부들이 독일에 오게 된 1960년대부터 겨우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독일 사회에서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반독재 여론을 조성해 국내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점에선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민주화운동이 훨씬 효과적이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다. 교민들의 숫자도 100만 명을 헤아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밀접해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이 국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나치 독재시대를 경험하고 냉전시대의 분단을 겪고 있는 독일은 한국의 상황과 비슷해, 역사적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었다. 특히 독일교회는 나치 독재시대에 저항하고 수난을 당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반독재운동과 신앙의 자유운동을 전개하는 데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였다.

우리 민권회 활동이 독일 개신교회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상당히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처럼 인식되어 있었다. 독일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장로회를 특히 지원하고, 보수적 교단과는 거리를 두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1975년 4월의 발췌 광산 사건과 프랑크푸르트 데모를 통해 신문 방송에 수습 차례 보도되면서 민건회(Forum für Demokratie in Korea)의 존재는 독일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홍보 면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보도는 1975년 6월 2일 저녁 독일 제1공영방송TV(ARD)의 방송이었다. 1,500만의 시청인구를 가진 저녁 8시 반 끝내아워의 모니터(Monitor) 프로에서 15분간이나 한국에서의 인권탄압과 불법 사형 그리고 독일 안에 있는 한인 광부들에 대한 정보활동, 발췌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프로에는 이삼열 민건회 대변인(Sprecher)과의 인터뷰도 나왔다.

또한 발췌 광산의 정보활동 폭로를 계기로 우리 민건회원과 대사관의 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악화되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여권 연장이나 체류 허가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회원들 중에는 정치망명(Asyl)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다. 나 자신 1975년 말 여권 연장을 위해 본 대사관에 갔다가, 박사과정 증명서와 장학기관 보증서를 제출했는데도 6개월밖에 연장 못해준다는 대답을 들었다. 나는 해당 영사와 한 시간의 논쟁 끝에 겨우 1년 연장을 받아 나왔다. 독일 사회와 정부의 여론과 지원을 얻지 않고는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여권 문제 때문에도 지속되기 어렵겠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서 민건회는 1975년 하반기부터 더욱더 대사회적 여론조성(Öffentlichkeit Arbeit)에 힘쓰게 되었다.

4월 26일의 프랑크푸르트 데모와 성토대회 시 낭독된(강돈구) “서독 수상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재독한인 민주화운동을 보호해줄 것과 한국

정부에 인권탄압을 항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침 발췌 광산 사태도 4월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외무성에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매우 존경하는 슈미트 독일 수상님께

독일 안의 비판적인 한국 광부, 간호원, 유학생, 종교인들의 연합체인 '한국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독일 수상님께 이 공개서한을 통해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나라를 비난하며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장님의 영향력을 발휘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신독재의 불법성, 고문, 탄압, 사형 등 현황 설명부분은 생략함)

독일 사회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발췌 광산의 한인 광부들이 정보원들에 의해 감시받고 협박을 당하며 심지어는 설교 목사를 공산당으로 몰아 교회에도 못 나가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부 비판을 했을 뿐이며, 정보부는 박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공산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수장님께 보내는 이 정권 비판의 편지마저도 한국 정부가 새로 만든 형법에 의하면 7년 징역과 10년 자격정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갈을 물리는 형법조항에 의하면,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외국인들에게 국가원수나 기관을 비판하는 자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3월 19일 자로 개정된 형법 114조)

(중략)

존경하는 수상님, 이런 악법이 독일에 사는 한국 교민들에게 작용할 폐단을 생각하시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일에서의 한국 정보 활동을 종식시켜주시고,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시어 인혁당 사형같이 명확한 증거 없이 시민을 죽이는 비인도적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국의 민주화에도 연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한국 민주사회건설 협의회 드림
(대표 서명, 송두울)

이 호소문 편지에 대해 민건회는 독일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5월 14일 자의 답신을 받았다.

존경하는 민건회 여러분!

독일 정부의 외무성이 여러분들께서 1975년 4월 26일 자로 수상님께 보낸 서한에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정부는 전 세계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의 고국에도 해당됩니다. 독일에서의 17명 한국인을 납치해간 사건을 언급하셨지만, 독일 정부는 많은 다른 경우에도 인권

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항상 의견을 숨기지 않았고 독일 사회의 공공여론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립서비스가 되지 않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길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여론에다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국적이나 개인적 위상에 상관없이 독일 국가기관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보부(KCIA)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을 표하며

위탁을 받아 베게너(Wegener) 서명

일단 우리는 독일 정부 외무성으로부터 외교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입장을 듣게 되어 기뻐다. 그러나 한국의 독재정권의 탄압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도 공개적 비판은 삼가겠다는 태도를 보여서, 역시 독일 사회, 종교계나 언론계를 통한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되었다.

1975년 6월 27~29일 다시금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인 민건회 의장단 확대회의에서는 발췌 광산 사건의 후유증이 된 김윤수 통역, 이종성 통역의 해임과 체류 문제, 여권 연장의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문제, 해외 단체와의 협력문제 등과 함께 김지하 구출운동에 관해 집중적 의론을 했다. 독일 사회에 반독재 여론을 확산시키고 민건회 조직 활동과

교포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 강연이나 출판이 필요하며, 관심을 끌 만한 행사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지하 구명운동과 시집출판

1974년 4월 민청학련 배후조종으로 구속되어 인혁당 관련자들과 함께 사형 언도를 받았던 시인 김지하는 전 세계적인 항의와 구명운동으로 종신징역으로 감형되고 1975년 2월에 석방되었다. 석방되자 곧 김지하 시인은 인혁당이 정보부의 날조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폭로했고 김 시인은 3월 13일에 다시 구속되었다.

이번엔 정보부가 김지하 시인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재판정에 올렸으므로 다시 사형 언도를 받게 될 위험이 농후해졌다. 중앙정보부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 분명한 「자필 진술서」라는 것을 날조해서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해 기소했고, 5월에는 최고 사형까지 규정한 반공법 9조 2항 재범자 특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시켜 김지하 처형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지하 시인은 명시 「오적」, 「비어」, 「황토」와 「금관의 예수」, 「구리이순신」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시인이며, 솔제니친에 비견할 만한 반독재 비판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이제 김 시인의 생명은 국제적 구명운동과 여러 나라 정치인, 지식인들의 항의와 압력이 없으면 희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우선 김지하의 석방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독일의 세계적인 명사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표하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는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 전 대통령,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수상,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작가,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 작가, 헬무트 골비처(Helmut Gollwitzer)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철학자 등이 제안되었다. 이들에 대한 교섭을 독일교회의 주요 인사들과 윤이상 교수 등을 통해 한 결과 우선 빌리 브란트 전 수상, 하인리히 뵐 펜 클럽회장, 루이제 린저(Luise Rinser) 작가 등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김지하의 사상과 문학을 교포들과 독일 사회에 널리 소개하는 일이 구명운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판매 금지 되었으니 책을 사올 수도 없고 해서, 우선 타자로 찍어서라도 김지하의 시집을 출판해 보기로 했다. 이 일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준모, 송영배, 김길순 임희길 등이 맡기로 했다. 그리고 독일어로도 몇 가지 번역해서 출판하는데 이 일은 뮌헨에서 독문학을 전공하는 배정석, 김원호, 강정숙과 괴팅겐의 최두환이 맡기로 했다.

김지하의 시집 한글판은 두 달 만에 완성되어 1,000부를 찍었다. 단시 15편과 장시 「오적」, 「비어」, 「구리 이순신」, 「민중의 소리」를 싣고, 동아일보에 실었던 「고행 74년」과 군사재판에서의 양심선언 등을 함께 편집했다. 표지엔 죄수복을 입고 묶인 김지하의 사진을 크게 넣었다. 비록 타자로 찍은 팸플릿 책이지만 우리는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권당 7마르크(3불)에 판매하기로 했으며, 판매대금은 일부 인쇄비를 제하고

전액 국내 투쟁 동지들과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광고했다(1975년 9월 15일 자 이삼열의 글 “김지하의 벗 여러분께”). 시집 출판 비용은 4500마르크나 들었는데 마침 1960년대 에버트재단의 한국 소장으로 한국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에리히 홀체(Erich Holtze) 씨가 2,000마르크를 보내오고, 발췌 광산 사건의 노동자들이 2,000마르크를 모아주어서 감당할 수 있었다. 시집을 판매한 대금 중 1,000마르크를 강원용 목사를 통해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에게 보냈다.

김지하 시집의 출판과 배포는 큰 호응과 성과를 가져왔다. 미국과 일본, 스웨덴에서도 요청이 와서 보내고, 독일 안의 민건회 지역별 10여 개 도시에 50여 부씩 보냈어도 금방 다 팔리고 모자라게 되었다. 독일어 번역은 쉽지 않았다. 독문학자의 손을 빌려도 1, 2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이쉬운 대로 몇 개의 시와 「양심선언」, 「고행 74」를 우리 회원들의 손으로 번역해 독일인들에게 알리는 소책자를 만들어 행사에 쓰도록 했다. 김지하의 시와 양심선언문 등이 알려지게 되니까 교민들과 독일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김지하의 사상과 시를 토론하는 모임들이 여러 곳에서 생기게 되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민건회원들, 이준모, 송영배, 임희길, 공광덕 등은 ‘김지하 구출위원회’를 조직해 김지하의 밤을 열어 시낭독과 음악연주 등을 곁들여 구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병옥(전 이대 음대 교수) 씨가 「밥은 하늘이다」라는 김지하의 시를 작곡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는데 대단히 감동적이었고, 예술성도 높았다.

이렇게 시작된 김지하 구명운동은 차츰 독일사회에 물결처럼 퍼져 나

갔다. 국제앰네스티 독일본부는 한국의 정치범들과 함께 김지하 석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국제펜클럽의 유명 작가들도 김지하 구출운동에 찬동하는 입장을 표명해 독일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다. 옥중의 김지하는 폐병을 오래 앓아 건강이 위태로우며, 사형 언도가 다시 되지 않아도, 종신징역형의 계속으로 옥중에서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기 저기 실렸다.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 회원들이 번역한 김지하의 시들이 인용되곤 했는데, 많이 인용된 구절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친다.”였다.

김지하 구명운동이 확산되면서, 특히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에서 해방신학과 관련한 김지하의 민중사상이 중요한 테마가 되면서 김지하의 시집과 양심선언문 등의 독일어 번역과 출판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민건회에서 독일어 번역을 맡은 강정숙, 배정석, 김원호, 최두환 등 독문학 전공자들은 열심히 번역했지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완벽한 번역출판은 매우 힘들었다. 아쉬운 대로 1976년에 우리가 번역한 작품들을 편집해 독일 카톨릭 교회선교기구인 카톨릭선교협력기구(Missio)와 개신교의 선교기구 EAGWM이 함께 조그만 『김지하 작품집(Kim Chi Ha)』를 출판했다. 이 책이 5,000부나 인쇄되어 전국에 뿌려지면서 김지하에 대한 열기는 더욱 높아졌다. 더욱 많은 신문과 방송들이 김지하에 관해 보도했고, 유명한 슈피겔(*Spiegel*) 주간지가 10월 25일 자에 김지하 이야기와 함께 박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10여 페이지에 걸쳐 게재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로 서독 펜클럽 회장인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이 일간지(*Frankfurt Allgemeine* 1976년 10월 13일 자)에 “김지하를 걱정

하며(Angst Kim Chi Ha)”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설을 실었다. 반독재 여류 작가로 유명한 루이제 린저는 베를린과 본 등 여러 곳에서 김지하에 대한 강연을 했다. 마침 1976년엔 김대중, 문익환, 안병무 등이 3·1 민주구국선언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구속자 석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특별예배, 강연회, 좌담회가 열렸다. 이런 행사 때마다 김지하의 시와 사상이 논의되었고 출판된 시집은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나는 민건회 여러 동지들과 함께 행사가 열리는 교회, 대학, 방송국 등으로 상황 설명을 위해 분주히 쫓아 다녀야 했다. 행사들은 너무 많아 여기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김지하의 시와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독일의 가장 유명한 출판사인 수어캠프(Suhrkamp)사에서 김지하의 작품을 출판하겠다고 제안해왔다. 운동을 위한 팸플릿 형태의 출판을 아니라, 정규 문학작품으로 출판하겠다는 것이다. 강돈구와 나는 의논해 이 번역을 독일인 부인이 있는 괴팅겐대학의 독문학자 최두환 씨에게 맡겨야 한다고 출판사에 제안했다. (최두환 교수는 나중에 중앙대학에서, 부인 레기나 최(Regina Choi)는 서강대학에서 독문학과 교수가 되었다.) 이 문학적으로 다듬어진 번역에는 여러 해가 걸렸으며 결국 1983년에야 『Die gelbe Erde(황토)』(Suhrkamp NF59)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독일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노벨상 후보가 되는 데 한몫했다.

결과적으로 김지하의 구속과 재판, 석방, 구명운동과 시집 출판은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식인 사회와 종교계의 지지와 지원을 얻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의 방독강연회

1975년은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기자 해고를 시작으로, 수도권 선교 자금 사건으로 김관석, 박형규 목사 등 구속, 김지하 시인 재구속 재판, 인혁당 관련자 8명 사형 집행, 이문영, 서남동, 안병무, 이우정 교수 등 해직, 장준하 씨 의문사망(8월 17일), 김철 통일사회당 고문 구속 등등으로 유신독재 수립 후 무자비한 탄압과 최악의 인권침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해였다. 해외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성명서를 써 내기도 바빴다.

이런 잔인무도한 탄압과 저항의 실태를 보다 생생하게 교민들과 독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추방되어 쫓겨난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와 시노트(James P. Sinnott) 신부에게 연락해서 민건회 이름으로 초청강연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10월 3~5일 모인 민건회 총회에서 동의를 받고 결정한 뒤 11월 9일~12일 사이에 두 분을 초청해 세 곳에서 보고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오글 목사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1960년대 초에 와서 약 15년 동안 인천지방에서 산업선교에 종사하며 부두노동자, 공장노동자와 함께 노동하면서 빈민 노동자층의 벗으로 일해 왔고 한국의 산업선교를 지원해왔다. 나는 대학 1학년 방학 때 오글 목사와 함께 공장 노동자들에게 전도하는 산업선교 여행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다. 오글 목사는 인혁당 사건 구속자들의 구명운동을 벌이다 1974년 12월 박 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고 당시엔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시노트 신부는 미국 카톨릭 외국선교부(Maryknoll)의 파견으로 1960년부터 농촌지방 신부로 일해 왔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사건, 동아기자 언론자유 투쟁, 김지하 구명운동에 강력한 지원활동을 해왔는데, 박 정권의 미움을 사 1975년 4월 말에 체류허가 거부로 추방되어 미주에 머물며 의회에서 증언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이 두 분을 초청해 독일에서 대중강연을 하고 교회지도자를 방문하게 하는 목적은 재독 한인들과 독일교회 측에 국내 민주운동의 실황과 미국의 비판 세력이 보는 한국 민주화의 전망을 알리고, 특히 노동대중의 관심과 산업선교자들의 끈질긴 노동운동을 소개하여 교민들로부터 민주화운동의 폭넓은 지원을 얻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먼저 한인 광부, 간호원 등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루르지역에 있는 뒤스부르그 한인교회가 11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오글 목사를 모시고 “한국의 산업선교”를 위한 특별예배를 드렸다. 이웃도시 보쿰과 캄프린 트포르트 등의 교회까지 교인들이 함께 약 300여 명의 노동자 신도들이 모인 예배에서 오글 목사는 “산업선교와 노동자의 인권”이란 제목으로 보고강연을 겸한 설교를 했다. 예배 후 4시 반부터는 친교실에서 한국 노동자의 실태와 민주화운동에 관해 좌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엔 쾰른, 뮌스터지역의 민건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 경제상황과 노동운동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한편 시노트 신부는 11월 9일~10일 베를린 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민주화운동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좌담과 토론회에 참석했다. 좌담회

에는 민건회원뿐 아니라 한인교회, 카톨릭 교회 교우들이 참석해 최근의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형 언도와 집행에 관해 현장에서 저항하다 경찰에 끌려난 시노트 신부의 체험담을 들었다. 베를린에서 시노트 신부는 앰네스티, 개신교 선교부,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11월 11일(화) 오전에는 두 분이 모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교회 의무국(EKD AuBenamt)에 와서 개신교 동아시아 선교위원회가 주최한 비공식 모임(10~13시)에 참석해, 독일교회의 한국 선교 관련 기관의 실무자 10여 명에게 최근의 한국 상황과 인권탄압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했다.

이 날 저녁 8시에는 이영빈 목사가 시무하는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게하르트교회에서 민건회 주최의 강연회가 열렸다. 여기엔 프랑크푸르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하이델베르크, 마르부르크, 마인츠에서도 교포들이 참석해 100여 명이 강연을 들었다. 이를 위해 500매의 광고 전단을 인쇄해 미리 돌렸다. 오글 박사는 “노동대중의 실태와 민주운동”에 관해, 시노트 신부는 “김지하의 수난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열렬한 강연과 현장 증언을 했다. 한국에서 15년간이나 살고 일했으므로 두 분은 모두 유창한 한국어로 강연해서 큰 감동을 주었다.

민건회의 조직과 해외 단체와의 연대

1974년 9월 총회 이후 민건회의 조직은 4명의 의장단과 지역대표를

포함하는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75년에 들어와 회원의 숫자도 늘어나고 출판, 섭외, 행사조직 등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면서 분야별로 책임을 맡기는 조직체로 체계화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많은 일들을 몇 사람이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75년 7월 18~20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인 확대 실행위원회에서는 민건회의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총회를 열어 정관(Satzung)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조직의 침투를 막고 회원들의 안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한인회나 교회, 노동자, 유학생들에 대한 민건회 자체의 정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민주운동가로 가장해서 우리 조직에 침투하여 과격한 발언을 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도 보였기 때문이다. 정보 수집을 위한 첩자들이 우리 세미나나 데모에 참여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해외 운동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문제였다. 독일 민건회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미주나 일본, 또 유럽 안에서도 스웨덴, 프랑스 등의 단체들로부터 연대와 협력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근년에 와서 해외의 여러 민주운동 단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나 지향하는 목표와 전략을 자세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민건회 내부의 이념적 차이와 갈등의 문제도 있었다. 처음부터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반 유신독재 민주화운동에 힘을 합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명서를 쓰는 데서나 세미나 토론에서나 해외 운동단체와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서 차이가 드러나고 논쟁이 벌어지

는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문제가 민주사회 건설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혹은 사회주의냐의 이념논쟁이었고, 통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와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견해와 관점의 차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신독재 체제를 물리치기 위해 모였지만 체제가 무너진 뒤 세워야 할 민주체제의 모습과 방향에 대해서는 특히 철학도와 사회과학도가 많은 유학생 사회에서는 논의가 간단치 않았다. 이것은 특히 국내와 달리 독일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 자유로운 해외 선진국이었던 때 문에 더욱 심각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발췌 광산 사태의 평가도 했는데 독일 검찰이 정보 활동에 대해 조사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니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 조성의 성과는 컸지만, 독일 정부나 교회는 친정부 반정부의 정치적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장 목사의 민건회 활동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목사가 정치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반대자 교인들을 생각해서도 옳지 않다는 견해가 독일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민건회가 정치단체가 아니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강변했다.

1975년 10월 3~5일에 프랑크푸르트의 마인 강가(Haus der Jugend)에서 민건회 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현장 개정이 논의되면서 전문에 실린 목적에 관한 수정안이 제기되었다. 창립총회 시 통과된 현장 전문엔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협의회는 독재체제의 철폐, 자유민주 질서의 회복, 자립경제의 확립, 국민대중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향상, 그리고 조

국의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기본적 태도 위에서 공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이념과 그 실천 방법을 모색하며, 국민대중의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건설적인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그 근본과제로 삼는다.”

여기서 “자유민주 질서의 회복”이 너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매여 있으니 이를 개정하지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대로 두자는 안도 있었지만, 자유를 뺀 “민주질서의 확립” 혹은 “자유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질서의 확립” 혹은 “민중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질서의 확립” 등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다. 조금씩 이념적 색깔의 차이가 있었다. 오랜 논쟁과 토론 끝에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질서의 확립”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조국의 민주적, 평화적 통일”은 “조국의 자주적, 민주적 평화통일”로 수정했다.

현장의 조직 부분의 개편은 의장단과 실행위원회의 2원조직으로 되어있던 것을 의장단,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3원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13개 도시별 지역협의회 대표와 9명의 선출된 회원이 중앙위원이 되어 의결기관이 되고, 실무를 담당할 상임위원을 연구, 출판, 조직, 홍보, 섭외 등 업무별로 선출해 책임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의장단은 그대로 유임되었다.

1975년 7월 18~2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인 확대 실행위원회에는 미국 뉴욕에서 오신 림순만 교수와 선우학원 교수가 참석해서 “미주의 민주화운동”과 “일본 군국주의와 한일관계”에 대해 강연했고, 해외에서의 민주화운동 전략에 관해 장시간 토론했다. 이미 일본 한민통(한국 민주회

북통일촉진 국민회의)의 배동호 씨로부터도 민건회와의 연대를 희망한다는 서신이 내게 와 있었고 8월 중 국제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니 참석해 달라는 초청도 왔다. 그러나 일본 한민통에 관해선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우선 유럽 안에 있는 민주운동 단체들과 연대를 위한 소통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그래서 일단 스웨덴에 있는 ‘재서전 민주수호협의회’(회장 임유직)를 방문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1975년 8월 29~31일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스웨덴과 독일의 민주운동단체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독일에선 민건회를 대표해 이삼열, 박대원, 이영준 이, 남북사회연구회의 오석근이 참석했고, 스웨덴에선 민주수협의 임유직, 오한영, 이희춘, 엄성태 4명이 참석했다. 여러 가지 정보교환 끝에 구주연합체 구성 문제를 논의했는데 독일과 스웨덴이 중심이 되어 덴마크(임민식), 노르웨이에 있는 민주수호 협의회와 프랑스의 조국 자주통일 촉진회(이희세)를 결합시켜 ‘통일 민주사회건설 구주연합회’를 가칭으로 결성하는 것을 노력해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거리도 멀고 상호 교류도 쉽지 않아 우선은 간행물 등 정보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김지하 구출 공동 성명서 같은 것을 내자고 의논했다.

그러나 내가 스웨덴에 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진 목적은 한인 교포들의 운동 유럽 연합체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다. 10명도 채 안 되는 서전 민주수호 협의회는 그나마 조성복 교수, 박화자 박사, 신필균이 가담치 않아 매우 빈약했다. 나는 회의가 있기 전인 8월 25일에 스톡홀름에 가서 한국에서 기독교학생회(KSCF) 활동을 하다가 스웨덴에 유학생으로 온 신필균을 먼저 만났다. 신필균을 통해 스웨덴 개신교 선교부(Church

of Sweden Mission)에 아시아 책임자로 있는 카린 오클란드(Karin Akland)를 만나 스웨덴 교회의 지원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일은 동경에서 국내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계신 오재식 선생(CCA)과 제네바에서 해외 기독교의 한국 지원을 조정하고 계셨던 박상증 선생(WCC)의 부탁이기도 했다.

나는 스톡홀름 회의를 마친 뒤 9월 1~3일에 읍살라(Upsala)로 가서 카린 오클란드 여사를 만나 국내 상황을 알리고 스웨덴 교회 선교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의 인권 상황과 산업선교에 관심을 가진 스웨덴 선교부와 자유교회는 그 후 수년 동안 WCC와 CCA를 통해 수십만 달러의 선교자금을 한국의 산업선교와 인권운동에 보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해 ‘한국위원회(Korea Committee)’를 조직했는데, 스웨덴의 자유교회 국제위원장이었던 칼 악셀 엘름퀴스트(Karl Axel Elmquist) 목사와 카린 오클란드가 주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웨덴 방문 후 1975년 9월 10일 자로 오재식, 박상증 선생에게 보낸 나의 보고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일어난 한인들의 민주운동은 지금까지 비기독교인 그룹에서 주로 해왔으며 교회와의 관련 없이 일어났음. 스웨덴 안의 한인은 약 200여 명이고 민주운동자들은 소수인데 대략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음.

임유직 오한영 등이 주도하는 민주수호협의회(4,19 데모 세력), 김영두의 북구 민주전선, 그리고 읍살라 대학의 조성복 교수를 중심한 평화통일운동 그룹

임. 조성복 씨는 만나본 결과 의심되던 북쪽과의 관계는 중립적인 평화통일 노선 때문인 것 같고, 다른 그룹과 협력이 안 됨. 민수협 그룹은 조직력과 열심이 있는데 이론적 바탕이 약하고, 4.19 데모에 미군 철수를 부르짖은 것은, 스웨덴인 반전문자를 동원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교포 사회로부터는 불신을 당하는 계기가 됨. 얼마 전 일본의 배동호 씨로부터 초청을 받고 한민통에 다녀왔음.

스웨덴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연대그룹(Solidarity Group)을 조성하는 문제는 카린(Karin)의 도움을 받아, 스웨덴 교회 대주교(Arch Bishop)의 외무국장이며 스웨덴 교회 선교부의 아시아 총무인 벵트 잉비손(Bengt Ingvasson) 씨를 만나 긴밀히 의논했음. 9월 중에 국회의원, 언론인, 앰네스티와 교회 인물 중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모아 '한국위원회(Korea Committee)'를 조직하겠다고 했음. 스웨덴 교회의 개발협력재단인 시카 기금(SIKA Foundation)의 지원문제는 스벤(Sven) 씨를 만나 협의했으며, 민주화 활동에 사용해도 좋으나 명목상으론 사회선교(UIM)나 아동복지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모는 5~6만 크로네 정도 써서 2~3만 크로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

한국 민주화를 위한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

독재정권에 의한 철권정치와 인권탄압이 극도에 달해 많은 희생자와

수감자가 나오게 되면서 해외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도울 것인가가 1975년도 후반기에 와서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해외 교포들이나 단체들이 동아일보 돕기도 하고 김지하 구명운동도 했지만, 지극히 소수인 해외 한인 민주인사들만의 힘으로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미국, 일본, 독일의 기독교 선교기관이나 개발원조기관을 동원해서 커다란 자금을 국내로 보내 인권운동을 장려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이 여러 나라의 교회기구에서 자리 잡고 일하는 분들이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이승만, 김인식 목사, 감리교회 선교부의 손명걸 목사, 캐나다의 이상철 목사, 일본 기독교 교단의 총무 나카지마 목사, 재일한인기독교청년회 총무 이청일 선생, 그리고 독일에선 서남독 선교부의 슈나이스(Paul Schneiss) 목사, 동아시아 선교위원회 총무인 프리츠(Gerhard Fritz) 목사와 스웨덴에선 동아시아 선교담당 카린 오클란드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들을 국내와 연결시키며 조정하는 역할은 에큐메니칼 교회연합기구인 '아시아 교회협의회(CCA)'의 도시농촌선교부(URM) 총무였던 오재식 선생이 일본 동경에서 수행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전도와 선교부(CWME) 간사였던 박상증 선생이 제네바에서 연결시키며 조정했다. 독일에선 동아시아선교위원회 위원인 장성환 목사와 상임자문위원 이삼열이 독일교회의 선교기관, 사회봉사기관들과의 협력을 맡아했고, 스웨덴에서는 신필균이 개신교회선교부와 협력하고 있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자들의 인권 선교와 사회정의 또한 민주화운동을 대

대적으로 지원하고 효과 있는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기독교 기관과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목표와 전략, 실천 방법 등을 의론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첫 국제회의가 세계교회협의회(WCC-CWME)의 초청으로 1975년 11월 5~8일 제네바의 교회수련원(Le Cenacle Retreat Center)에서 열렸다.

이 모임엔 위에 열거한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에서 한국을 돕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에큐메니칼 지도자들 40여 명이 참석해, 한국 교회의 활동 상황을 듣고 협력사업의 신학적, 선교적 의미와 수행 방법, 실천과제에 관해 폭넓은 토론과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미국 연합장로교 총무인 뉴턴 터버(Newton Turber)와 선교부 총무 교지 부마, 교회연합회(NCC) 총무인 에드 라이덴(Edwin Luidens), 캐나다 선교부의 크리스 퍼거슨(Chris Ferguson), 독일교회 사회봉사위원회 총무 노버트 클라인(Nobert Klein),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에밀리오 카스트로(Emilio Castro) 선교국장과 나이난 코쉬(Ninan Kosch) 국제위원장, 조지 토드(George Todd) 도시산업선교 총무 등 에큐메니칼 거물들이 위에 열거한 관련자들과 함께 참석했고, 한국에서 추방된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도 여기에 참석했다.

이 제네바 국제회의의 주요 성과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기관의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한국 교회의 인권과 사회정의, 민주화를 위한 선교적, 신앙적 활동을 돕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는 데 있다. 각국의 교회들이 형편과 전략에 따라 후원하되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위한 해

석은 공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자료의 수집과 종합분석 전략수립을 위한 센터(Dokumentation Center)를 해외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매년 5~1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교회들은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교회와 민주운동 단체들을 도와, 해외 한국인들의 민주의식과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며 협력할 것도 결의했다.

11월 6~7일 이틀간은 세계교회지도자들과 함께 회의했고, 5일과 8일은 한국인들만 따로 모여 전략협의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김재준, 이상철(캐나다), 이승만, 손명걸, 김인식(미국), 오재식, 최경식(일본), 장성환, 이삼열(독일), 신필균(스웨덴), 박상중(스위스)이었다. 한국인 회의 의장은 이상철 목사가 기록은 이삼열이 맡았다. 먼저 각 나라의 운동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일본에선 ‘한국문제 기독교 긴급회의’가 1974년 1월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미주에선 ‘북미주 한국인권연합(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를 발족시켜 활동을 구체화시킬 단계에 있으며, 독일에서는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 활동과 독일교회와의 협력 사항들이 보고되었다.

한국 상황의 분석과 해외운동의 전략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와 모색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해외 민주화운동의 기독교자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한 것이다. 회의 보고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내, 국외의 제반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연결시키며 조직활동, 외교적 활동, 국내지원 활동을 통제 강화할 수 있는 중
심부(Center)를 설치하는 일과 이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결집시키는 일이다.
중심부와 연락망(network)이 짜진 뒤에 민족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문 및
프로그램의 작성, 제반 활동의 전략, 전술적 검토와 통제, 인적자원의 기능적
활동 분담 등이 이 조직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8일의 회의에선 이러한 중심부를 캐나다 토론토에다 설치하며, 그 명
칭을 ‘한국민주사회건설 세계협의회(World Council for Democracy in Korea)’
라고 하기로 했다. 이것은 독일과 캐나다에 이미 민주사회건설협의회가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뉴욕이나 미국 도시들에서도 쉽게 확
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선 한민통이 있지만 기독교와 신뢰 관
계가 없고 일본 기독교자들이 조직한 긴급회의가 중심이 되고 한국인들이
뒤에서 돕는 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새롭게 결성된 ‘세계민건’의 의장으로는 김재준 박사, 사무총장에 지
명관 교수, 대변인에 박상중 선생, 회계에 손명걸 목사, 감사에 이승만,
김인식 목사를 선정했다. 이상철, 홍동근, 오재식, 장성환, 이삼열, 신필
균과 국내의 이태영, 강문규를 중앙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
도 여기 다 기록할 수 없는 실천 전략과 예산 모금방법까지 협의했다.
제네바 회의는 해외 기독교자들의 민주화운동 국제 네트워크를 결성한 역
사적 회의였다

제네바 기독교 회의는 해외 민주화운동, 특히 기독교들이 주도하는

운동에 기독교 선교, 봉사기관들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채널을 만들어주었다. 교회가 어떻게 정치운동에 돈을 댈 수 있는냐는 비판이 보수적 기독교인들로부터 나왔지만, 진보적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기독교의 양심으로 정의와 인권을 위해 또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일은 신앙적인 행동이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교회는 나치 시대에 저항한 고백교회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는 한국 교회 지원을 신앙적 행위로 알고 실천했다. 또한 민건회의 활동과 출판 사업에도 독일교회는 재정지원을 했는데, 독재정치와 억압의 상황, 교회의 저항운동, 김지하의 양심선언 등을 독일어로 번역해 알리는 작업, 또한 이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교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출판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당시 민건회의 회원이 13개 지역 100여 명이나 되었고, 매월 5마르크씩 회비를 내도록 했지만 실제 회비수입은 연간 2,000~3,000마르크에 불과했다. 민건회 총무(강돈구)는 서남독 선교부에다 1975년에 2만 마르크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주로 세미나와 출판비용이었다. 1976년에 민건회는 1만 마르크의 지원을 받았다. 또 민건회의 여성운동을 주도한 강정숙은 독일교회 개발협력처(Kirchliche Entwicklungsdienst)에다 김지하의 시집 출판과 구명운동 세미나와 재독 한국 여성들의 세미나 비용으로 자세한 예산을 만들어 2만 7,920마르크를 신청했다(1976년 11월 4일). 개발협력 사업부의 켈러(Köhler) 씨는 동아시아 선교위원회 프리츠

총무에게 민건회의 성격과 조직, 김지하의 저항시 출판, 독일 안의 한국 여성 문제 세미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추천 여부를 물었다 (1976년 11월 26일 자 편지).

여기에 대해 프리츠 목사는 4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편지로 민건회에 대한 신뢰 표시와 공동사업들(김지하 시집 한국자료집 등)을 소개하면서 재정지원을 강하게 추천했다. 독일교회 개발협력처(KED)는 1977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결정해 1만 3,920마르크(신청액의 절반)를 지원하겠다고 통보해왔다(2월 21일 자 강정숙에 보낸 편지). 이 지원금은 김지하 구명운동 집회와 여성문제 세미나 등에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김대중, 문익환, 김지하 등 구속자 석방운동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는 3·1절 기념미사가 집전될 때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에 서명한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정일형, 서남동, 이문영, 안병무, 이해동, 김승훈, 함세웅 등 18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입건되고, 대표적인 민주인사들이 정부전복 선동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미 박형규, 지학순, 김지하와 많은 학생, 교수, 종교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씨 등 국민적 지도자들까지 구속 재판하게 되니까 국내에선 물론 국외에서도 크게 보도되면서 비판운동과 구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독일에서도 삼일절 민주구국선언 사건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

히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교수 등 잘 알려진 신학자들이 구속되면서 독일교회는 나치 시대를 연상하면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특별예배와 기도회를 열었다.

앰네스티는 구속자들을 개인별로 지방조직에 배당해서 “○○○를 돕는 모임”식으로 조직적 구명운동을 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앰네스티 133 그룹에겐 함세웅 신부가 배당되어 함 신부의 석방운동에 전적인 활동을 했다. 런던 본부에서 해당 구속자들의 이름과 재판 일정을 알려오면, 각 지역 앰네스티 그룹에서는 그 배경과 죄목 또 사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민건회 회원들에게 문의가 오고 법률 조항 등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밀려온다. 신문사,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계속 오니까 공보활동과 대변인을 맡게 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여기 저기 다녀야 했다.

슈투트가르트의 방송국에서는 튀빙겐의 세계적 신학자 몰트만(Jürgen Moltmann) 교수와 나를 초청해 한국 상황과 교회의 저항운동에 대해 한 시간의 대담프로를 방송하였다. 프랑크푸르트의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독일교회 외무총장 헬드(Held) 박사와 이영빈, 손규태, 이삼열을 강사로 초대해 한국 구속자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었다(1977년 11월 17일). 그 전날(16일)엔 반나치 여류작가로 유명한 루이제 린저 여사를 초빙해 한국 상황에 대한 강연을 해서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음 날 한국 문제 특별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한국을 돕도록 했다. 이런 특별기도회와 모임들은 매우 자주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다.

민건회에서는 이제 데모하는 것보다 독일인들을 모아 한국 상황을 알

리는 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속자 석방운동을 겸한 집회나 한국의 밤을 여러 곳에서 열게 되었다. 1976년 9월 18일엔 프랑크푸르트 근교 그라벤부르흐(Gravenbruch)에서 독일인과 한국인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지하의 밤”을 열고 루이제 린저 여사와 송두율의 강연 후 김지하의 시 낭독과 윤이상 작곡의 음악연주가 있었다.

12월 20일 저녁에는 베를린 시의 요하네스 교회에서 “한국 정치범을 위한 연대모임”을 열어 알베르츠(Heinrich Albertz 전 베를린 시장)과 엠네스티의 구속자들과 한국 상황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 김지하의 시를 낭독하고 윤이상 작 합주곡(An der Schwelle)이 연주되기도 했다. 이런 모임 때마다 민건회는 독일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반독재 여론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에 사는 한국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엔 점차 한계가 드러났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하는 광부, 간호원 등과,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야 할 유학생들이 대부분인 교민 사회에서 회원을 확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화의 뜻에는 찬동하지만 귀국을 생각해 회원이 되거나 내놓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민건회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장기 체류자이거나 독일 국적을 받은 교포들이게 되었다.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은 망명을 해서라도 장기 체류를 각오하지 않으면 정보부의 압력 때문에 운동에 나서기가 어려웠다.

유신독재체제가 온갖 폭압과 언론 통제를 통해 장기화되는 국면을 보면서 민건회 임원들은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독일 국적을 갖고 있거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분들이 운동의 중심체가 되어야 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점차 독일 사회에서 영향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유학생들보다는 독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회의 조직운영을 맡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고려와 토론을 배경으로 1976년 10월 9~10일 뢰르르트(Hürth)에서 모인 민건회 3차 총회는 구조와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의장에 윤이상 교수, 부의장에 이영빈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제까지 주도했던 유학생들은 분야별 상임위원이 되어 대표성보다는 실무를 맡게 되었다. 선출된 상임위원은 강돈구(총무와 재정), 박대원(조직), 송두울(연구), 이삼열(공보), 이준모(편집), 임희길(출판)이었다. 또한 자동적으로 중앙위원이 되는 8명의 지역대표 이외에 안석교, 김길순, 송영배를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 13개 대도시를 단위로 지역협의회를 조직했던 것을 ① 베를린, ② 바이에른, ③ 바덴뷔르템베르크, ④ 노르트라인, ⑤ 베스트팔렌, ⑥ 헤센, ⑦ 홀슈타인, ⑧ 니더작센의 여덟 개 주단위의 지역협의회로 재조직했다.

민건회는 이제 교포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직 활동보다는 독일 사회를 향한 홍보활동과 석방운동, 국내지원 활동에 더 무게를 실었다. 윤이상 의장은 베를린에서 모인 “한국의 정치범들을 위한 연대모임”(1976년 12월 20일, 요한교회)의 참석자 일동의 이름으로 독일 수상과 유엔 사무총장 발트하임(Kurt Waldheim), 미국 대통령 당선자 지미 카터(Jimmy Carter), 한국 대통령 박정희 앞으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전보를 보냈다. 독일 수상에겐 한국 파쇼정권과의 경제관계를 재검토 해달라는 것과 한국

정보원들의 위험한 활동을 방지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독일 외무성에서 윤이상 교수 앞으로 답장이 왔다(1977년 1월 13일). 수상께서 외무성으로 답변을 지시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독일 안에서 민주화운동하는 한국인들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을 답장에서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간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룰(rule)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독일사회의 여론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으며 한독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고는 이미 표시했다고 답했다.

윤이상 교수와 친한 오스나 부퓌 대학 총장을 지낸 프로이텐베르크(Günter Freudenberg) 교수는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일인들을 결속시켜 ‘한국위원회(Korea Komitee)’를 조직했다. 한국 문제를 독일 사회에 알리고 민주 인사의 석방과 유신독재 철폐,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운동을 펴겠다고 했다. 1977년 2월 26일 본(Bonn)에서 창립총회를 연 ‘한국위원회’는 회장에 프로이텐베르크 교수, 부의장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브라이텐슈타인(Breidenstein) 목사를 선출했다.

‘한국위원회’는 1977년 5월 16일에 베를린에서 TV평론가 단지보이(Roshan Dhunjiboy)와 루이제 린저, 슈피겔(*Spiegel*)지 편집인 퀴스터(Wulf Küster)를 연사로 초대해, “한국은 제2의 베트남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프로이텐베르크 회장은 사회를 보았다. 한국의 위기를 독일 사회에 알리기 위한 시도였다. 민주구국선언으로 구속된 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는 1976~1977년에 앰네스티, 독일기독교학생회

(ESG), 시민단체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열렸다. 드디어 독일교회연합회 (EKD)의 최고지도자인 클라스(Helmut Class) 총주교와 바이츠제커(Richard Weizsäcker) 의원(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다), 쿠르트 샤프(Kurt Scharf) 감독, 칼 Immer(Immer) 교회의장이 서명해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명동성당 사건으로 구속된 성직자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하고 사면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1977년 4월 12일).

독일 민주화운동의 이념갈등과 분화

우리는 1974년 민건회를 창립할 때부터 공개적, 연합적, 지속적 저항과 투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합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연합적 투쟁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웠다. 이념과 노선, 계층과 종교를 불문코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독재타도에 힘을 합치자고 했지만, 사상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생각과 노선의 차이가 드러나고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데모의 구호나 성명서를 쓸 때도 그랬지만, 특히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을 때, 민주화의 비전과 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혹은 사회주의냐의 논쟁이 있었고, 특히 경제성장과 계급 투쟁문제, 자주적 민족통일과 외군철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수, 진보 그룹의 심한 갈등과 편 가르기가 나타났다.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지만,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이념과 노선의 갈등과 대립은 투쟁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도 결국 이 갈등과 분열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초기에 우리는 대중적인 민주화운동을 위해 친공산주의나 친북한노선은 배제시키기로 했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민건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었다. 그래서 『주체』 잡지를 발간하는 ‘남북사회 연구회’의 조직원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체』라는 잡지에는 장일구라는 가명으로 이런 글도 실렸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사상,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반민중적이고 반민중적인 못된 짓을 꾸미고 실행에 옮긴 자들의 절대다수가 예수교 신자들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예수교의 반민중적 본질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다(『주체』 9호 39쪽).

“계급사회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혁명의 전 과정을 앞당기자”(『주체』 9호 46페이지)

『주체』 잡지는 ‘남북사회문제연구회’가 발행하는데 발행인은 독일에 서 어린 시절부터 자란 정철제 박사였고 편집인은 한국에서 카톨릭 신학교를 나오고 독일 유학중인 오석근 씨였는데, 이들 이름으로는 전혀

글을 신지 않았고, 모든 글이 익명과 가명으로 쓰였다. 누가 보아도 이런 글들은 교조 마르크스주의나 스탈린주의에 물든 공산주의 사상이며, 북한 중심의 통일을 지향하는 자들의 생각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행인과 편집인은 이런 글의 내용엔 책임이 없고 투고된 원고를 실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민건회 안의 회원 중에는 반공의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주체 그룹을 경계했고, 이들이 민건회에 들어오면 탈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민건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토론회에선 남한의 독재와 함께 북한의 김일성 독재도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가 하면, 남한의 독재를 옹호하고 민주화를 저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서 이념과 노선 논쟁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념논쟁이나 노선 싸움이 일어나면 갈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은 북한과의 통일문제, 미군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남한의 민주화와 민주사회 건설의 길에 대해서만 집중하자고 역설했지만, 언론자유가 보장된 해외에서, 반공법의 규제도 없는 토론공간에서는 막을 길이 없었다. 결국은 서로의 입장과 사상을 알게 되면 누구는 반공주의자, 누구는 좌익분자로 매도하는 분위기와 논란이 불가피했다.

이런 문제를 정보부와 대사관 측에서는 악용해서 몇 사람의 발언을 문제 삼아 민건회를 용공집단으로, 빨갱이로 매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민건회로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급진적(radical)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수적인 반공적 회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사상과 입장을 다 조사해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양자를 가르는 한계도 불분명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 광부로 왔다가 임기를 마치고 유학생으로 등록하거나 취업을 한 노동자들이 몇 사람 민건회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노동계급의 해방과 인민에 의한 자주통일을 외치면서 ‘재독한인 노동자 연맹(노련)’을 조직했다. 주로 루르 공업지대에 살고 있는 광부, 간호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 의식을 계몽하고, 계급지배를 타파하는 민중해방의 민주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1975년 11월에 이영준, 한영태, 이종현 등이 중심이 되어 노련을 결성했고 1976년 초에 『해방』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노동계급의 승리”와 “조국통일”, “세계인민의 자유와 평화” 등의 용어를 쓰면서 조직활동을 시작했다.

유학생 사회에서 생긴 『주체』 그룹이 노동자 사회의 ‘노련’으로 확산되는 느낌이었다. 민건회 상임위원회가 열려 노련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벌였다. 나는 이대로 두면 민건회 전체가 용공 좌익집단으로 몰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퇴출을 주장했다. 강돈구, 송두을, 이준모, 박대원 등 상임위원들도 동조해주었다. 결국 1976년 10월 24일 상임위원회는 노련회원이 민건회 회원으로 이중 가입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영준 노련회장과 4명의 회원을 민건회에서 제명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민건회 안에는 진보적인 사회과학과 철학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많았고, 반공 군사독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남

북한 민족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은 적어도 동서독의 관계 개선처럼 남북의 교류협력은 있어야 하며, 남북대화가 꼭 막힌 상태에서는 해외의 민주 세력이 뚫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백림 유학생 납치사건도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해외 영주를 각오한 사람들은 북한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민주화운동은 통일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독재체제는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하지는 말이나?” “북한의 대남 공작 전술에 말려들어 공산화 통일론에 말려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그 반대편 회원들의 주장이다. 결국은 북한체제를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북한에 관한 자료도 읽어보고 세미나도 해보았지만 정확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웠다. 북한독재체제에서도 “청산리”나 “대안” 생산공동체 같은 데서는 배울 것이 있다고 사회학자 송두율이나 경제학자 오길남은 이론적으로 주장했다. 이것이 아마 송두율로 하여금 북한을 몰래 들어가서 내재적 접근이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송두율 박사는 이 당시 뮌스터대학 사회학과의 조교수로서 중국, 북한, 쿠바 등의 사회주의 발전 모델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민건회원 누구에게도 송두율은 북한 방문을 말한 적이 없었다.

민건회의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진보적 학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은 반공을 철저히 신봉하는 기독교인들이나 남한의 체제 안에서 민주화운동

을 하려는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조직을 떠나려는 회원들이 생기게 되었다. 민건회의 강령 토론 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려던 배동인은 1976년 3월 16일 송두율 중앙위원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민건회 탈퇴를 통보했다. 민건회의 기본노선이 애매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이해 차이 때문에 함께 일하기가 힘들어 탈퇴를 선언한다고 했다. 배동인은 민건회 조직은 떠났지만,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계속하며, 김지하 구명운동 등 사안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했고 그 후 ‘버트란드 러셀 협회’를 조직해 『햇불』이라는 잡지를 펴내며 박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말살과 인권탄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민건회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의 결의 없이 성명서가 하나 발표되었는데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남북사회문제연구회 한인노동자연맹의 공동성명서(1976년 6월 1일)가 나왔다. 이 성명서에선 구속자 석방과 정보부원 추방과 함께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병기를 철거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사고였지만 누군가 일을 저질러서 고칠 수가 없었다. 주체그룹과 노련그룹의 성명서에 민건회 이름이 덧붙여진 것이다.

이 공동성명서를 이유로 배정석, 김복희, 박종대 씨가 탈퇴선언을 보내왔다(1976년 7월 29일). 배정석 씨는 『민주한국』에 익명으로 실린 글을 문제삼아 송두율, 강돈구, 이삼열에게 긴 항의문을 보내왔다(1976년 2월 11일). 익명의 글은 한국의 독재체제를 미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허수아비로 규정하고, 자주통일의 유일한 방해물이라고 보면서 북한 독재를 비판하지 않음으로 편향된 독단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민건회가 왜 이

런 글을 『민주한국』 기관지에 실었느냐고 항의했다.

민건회 안의 기독교 그룹에서도 탈퇴자가 생겼다. 베를린의 한인 교회 목사인 정하은 박사(전 한신대 교수)는 공식통보 없이 민건회를 떠나 ‘인권문제 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하겠다고 했다. 이정의 씨도 탈퇴선언을 보내왔다. 이런 사태는 민건회의 큰 딜레마였다. 좌파를 내쫓았는데 우파가 또 떠나는 모습이다. 남북관계의 모순과 국내외의 풍토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갈등이고 분화였다.

독일 안의 한인 중 간호원 여성들이 7,000~8,000명 있음을 주목하며 민건회 여성회원들이 여성모임과 운동을 시작했다. 1976년 4월 16~19일 하이델베르크에서 30여 명 여성들이 모여 ‘한국 사회 변혁과 여성문제’를 놓고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준비와 진행은 강정숙, 박소은, 손덕수가 맡았다. 9월 24~26일엔 같은 곳에서 재독간호원의 문제를 가지고 40여 명의 여학생과 간호원 들이 모여 열면 세미나를 열었다. 여성해방 이론과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인식시킴으로써 재독 한국 여성운동의 효시를 이루었다. 여성들의 반응과 기대가 높아 이후에는 민건회에서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여성문제 세미나가 계속 조직되었다. “후진국의 여성문제”를 주제로 굼머스바흐에서 1977년 5월 19~22일 모인 제3차 여성문제 세미나엔 50여 명이나 참여했다. 점차 간호원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강정숙 등 민건회 유학생 여성들이 토론을 주도해갔다.

이처럼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은 민주사회건설협의회로 시작되었지만, 유학생 세미나, 노동자들의 모임과 조직운동, 한독기독자 연구 모

임, 여성문제 세미나 등으로 분화되고 다양화해갔다. 이념적, 종교적 계층이나 그룹별 분화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일본과 미주에서의 두 갈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정책노선에 따른 갈등과 분화현상은 독일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일본과 미주에서도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독일보다는 한인 인구도 크게 많고 지역도 넓어 각지에서 일어난 운동과 분화과정들은 다 파악할 수가 없지만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대강의 흐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독일교회 동아시아선교위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등과의 관련 때문에 1974년부터 매년 거의 한 두 차례 미국이나 일본을 방문할 수 있었고, 그 기회에 미주와 일본의 민주화운동을 살펴보며 민주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1975년 11월 제네바 회의를 통해 결성된 미주, 일본, 유럽의 기독교 민주인사들의 네트워크는 해외 민주화운동 단체들이나 주요 인물들과의 접촉과 연대를 가능케 해주었다.

해외에서의 민주화운동과 국내운동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일본 동경에 있었다. 한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동경을 거쳐서 다녔고, 정보와 연락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요지가 동경이었다. 1970년대 유신독재 시절 학생운동과 언론자유운동, 교수, 문인, 종교인들의 저항운동을 도와주며 정보를 종합해 밖으로 보내주는 곳이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KNCC)였다. 김관석 목사가 총무로 있고 인권위원회 사무실이 그 안에 있어 모든 구속자들의 가족들이 모이고 소식이 오가는 센터가 되었다.

유신 선포 직후 1973년 부활절 뼈라사건으로 박형규 목사 등이 구속되고 기독교학생들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대거 잡히면서, 해외 교회들로부터 후원과 방문객이 밀려오게 되었고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사무국장 이경배)은 공개된 유일한 운동본부처럼 되었다. 앰네스티나 국제 기독교 기관들 심지어 외신 기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종로 5가를 통해 민주인사들과 연락하고 소식들을 주고받았다.

국외와의 연락 창구는 동경 신주쿠에 있는 일본 기독교회관에 자리한 일본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구들이었다. 마침 한국기독교학생연맹(KSCF) 총무를 지냈고 학사단(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주도했던 오재식 선배가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도시산업선교(URM) 국장이 되어 동경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본교회는 교단 총무를 지낸 나카지마 목사와 쇼지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인권운동을 돕는 운동이 일어났고, 1974년에 ‘한국문제 긴급회의(긴규카이)’를 조직해 구속자 석방과 종교의 자유를 호소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 동포들 중 교회 인사들은 일본인들과 함께 ‘긴급회의’ 속에서 비공개로 활동했다. 동경의 최경식 목사, 오사카의 이청일 선생, 교토의 최충식 목사 등이 연락망에 있었다. 일본 교회의 외형적 보호 아래서 한국 국내 민주화운동과 전략적 연결을 하고 있는 곳이 신주쿠에 자리한 일본 교단 회관이었고, 여기에 오재식 선생과 여러 외국

인 직원들이 있었다. 동경여자대학의 교환교수로 와 있던 지명관 교수, 소피아대학에 연구원으로 체류했던 김용복 박사, 또 한때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아시아 총무로 와있던 강문규 씨 등이 1970년대 동경센터의 핵을 이루었다.

지금은 다 알려졌지만 1970년대 당시엔 한국 정보부의 감시와 통제 때문에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명한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연재한 일이다. 일본어에 능숙한 지명관 교수가 매달 한국 정부의 탄압과 민주화운동 소식들을 소상하게 기록한 통신을 써서 해외에 알리는 소스가 되었다. 그 필자가 지명관 교수였다는 사실은 기독교 동지들은 알았지만 유신시대 말까지 철저히 비밀로 지켜졌다. 독일에서 온 선교사 슈나이스 목사 등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동경과 서울을 드나들며 정보를 가져오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다. 우리가 독일에서 민건회를 조직해 국내와 연락할 때도 동경의 오재식 씨 사무실이 그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데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 60만 명을 대상으로 반독재운동을 하는 센터는 한민통이라는 교포조직이었다. 1973년에 일본 방문 중인 김대중 씨를 의장으로 모시고 8월 15일에 한민통을 조직하려 했는데 며칠 전인 8월 8일에 김대중 씨가 납치되었다. 그 뒤에 김재화를 의장 대행으로 세우고 배동호, 광동의 씨가 중심이 되어 커다란 조직을 만들었고 민족시보를 인쇄해 전 세계에 돌리는 등 해외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1974년 삼일절 데모 직후 한민통의 배동호 씨가 나에게 편지해(3월 19일 자) 유럽에서 처음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

을 일으킨 민건회의 창립을 축하한다며 연대와 협력을 제안해왔다. 나는 일단 격려에 대한 감사 표시와 국제적 여론조성과 교민 대중의 계몽을 위해 정보 자료 교환 등 협력을 하자고 답신했다(4월 3일).

그러나 일본에 있는 기독교 민주 동지들로부터는 한민통의 정체와 노선이 문제가 있으며 친북 단체로 의심도 받고 있으니 접촉을 삼가고 함께 행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경고가 왔다. 자칫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기독교 민주인사들 박형규 목사나 김관석 목사 기독교학생들이 용공 친북단체 연계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독교 '긴급회의' 멤버들도 전혀 한민통과 연락이나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통에서는 민건회의 임원들과 윤이상, 송두을 등에게도 개별적 초청과 연락을 해왔고, 한민통과의 적극적 협력과 연대를 주장하는 분위기도 생겼다. 나는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위해 한민통을 방문해볼 생각을 했는데, 마침 1976년 8월 13~15일에 동경에서 민주회복 쉼기대회와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참석해 달라는 편지와 전화가 곽동의 씨로부터 왔다. 나는 정보부 감시 위험을 무릅쓰고 참석하기로 했고 내 이름을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참관만 약속했다.

나는 요시다(吉田)라는 가명의 이름표를 달고 오다 마코토(小田 実)라는 유명 작가가 사회를 보고 우쓰노미야 도쿠마 등 자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국제회의에 참관했고, 윤이상 교수는 공개강연과 함께 즉석에서 작곡한 민주화운동 노래도 발표했다. 국제적인 교수들과 작가들까지 200여 명이 참가한 국제회의는 큰 성황이었다. 8월 15일 반독재 데모에는 한청(재일 한국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재일 교포 3,000여 명이 행진하는

거대한 조직운동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도미사카(독일 선교부 관리 숙소)에 열흘 간 머물며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인터뷰했다. 특히 월간 세카이(世界)지 편집장 야스에 씨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와 일본 정계의 현황, 대한정책 등에 대해 두어 시간 인터뷰했다. 『한양』지의 편집장 김인재 씨, 아쿠타가와 수상 작가 이회성(李灰成) 씨, 정경모, 이시재, 니콜라 가이거(Nicola Geiger) 여사 등을 만나 일본 사회와 한민통에 관한 정보들을 들었다.

한민통의 주요 인사들은 조련계는 아니고 민단계에 있다가 탈퇴한 삼천리 그룹에 속했던 인물들이었다. 남북분단 때문에 갈라진 재일 동포들은 친북과 친남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민단에 속한 동포들이 조선어 교육 때문에 조련계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도 했다. 조련계 학교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전물과 김일성 서적들은 여기 저기 널려 있었다. 한민통의 수십 명 사무직원과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국제회의를 운영할 막대한 자금을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조련계와 민단 측 동포들이 한 도시 한 마을에 어울려 사는 일본에서 후원금이나 성금을 엄격히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한민통의 핵심 간부인 곽동의 씨의 요청으로 저녁을 함께 먹고 하룻밤 여관에서 묵으며 운동노선과 전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민통의 민주화운동노선은 결코 과격한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선생을 의장으로 모시고 박 정권과 유신체제를 물리치고 민주 회복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촉진운동에 가서는 북한 비판은 하지 않

고, 외세의 간섭과 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혹 친북통일노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북한 비판을 내놓고 하지 않는다고 모두 친북단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곽동의 씨는 약속한 여비라며 봉투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세어보니 3,000달러에 해당하는 일화 30만 엔이었다. 나는 할인된 비행기 표로 왔기 때문에 이 돈은 너무 많아서 영수증을 보이고 13만 엔만 받고 돌려드렸다. 나는 곽동의 씨에게 솔직하게 기독교 측 운동과 공개적인 연대활동은 어렵겠다고 말했다. 민건회 회원들은 남한 국적인이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미군 철수나 반제투쟁을 통한 자주통일운동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일본 사회와 재일 교포들을 향한 반독재 여론형성과 국제적 압력을 일으키는 데는 일본 한민통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독일의 민건회와의 조직적, 공개적 연대활동은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며 국내와의 유대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독일에서 영주하는 교포들 윤이상, 이영빈, 송두율 등등의 민건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통일운동까지 적극적으로 한민통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일본과는 달리 미주에서의 한인 교포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고, 민주화운동도 기독교 단체나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4년 4월 재미기독교학자회의 초청으로 내가 미국에 갔을 때는 김대중 선생과 함께 조

직했다는 미주 한민통이 있었고 강영채, 이근팔, 이재현, 이성호 씨 등이 주 멤버로 있었지만, 지도체계의 문제로 외부 활동이 원만치 못했다.

토론토에 결성된 ‘캐나다 민주사회건설협의회’(박찬웅 회장)는 『뉴코리아 타임스』 주간신문(전충림 발행인)과 함께 캐나다와 미주 교포 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1980년대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여기엔 김재준 목사, 문재린 목사, 이상철 목사 등 지도자들이 후원해서 든든한 조직활동을 해갔다.

뉴욕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이승만 목사, 립순만 교수, 선우학원 교수, 안중식 목사, 임병규 씨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으며 1975년 3월 5일 동아일보에 ‘재미 민주사회건설협의회’ 5인 대표 이름으로 ‘구속자 석방’,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실었다. 워싱턴의 장성남(자유공화국 발행인) 씨도 가담해 워싱턴 지부를 만들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는 1975년경부터 ‘조국 민주회복 남가주 국민회의’가 결성되어 차상달, 김상돈, 이용운, 명재휘, 노의선, 홍동근 목사 등이 3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활동했다. 뉴욕에는 목요기도회(사무국장 한승인 장로)를 중심으로 기독교 대중운동이 전개되었고 미국 민건회의 지도인사들인 이승만 목사, 립순만 박사 등이 주도해갔다.

그러나 미주에도 일본 한민통과 연대하는 비기독교인 운동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립창영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한인협회(민협)’ 속으로 결속했다. 『해외 한민보』 신문 발행인 서정균, 고원, 최석남, 이흥로, 최정렬 등과 ‘민주통일촉진회(민촉)’를 주도하던 노광욱, 지창보 등이 가담했다. 미주 안에서는 북한과의 교류와 통일, 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

장하기 때문에 교포사회에서는 친북 좌파로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미주 한민통은 일본 한민통과는 이념이나 노선이 전혀 달랐고 반공적 인사들이 많아 민협과는 대립적 위치에 있었다. 1975년 한때는 김재준 목사를 의장으로 모시고 안병국, 송정율, 김성락 목사 등의 원로를 고문으로 해서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애틀, 토론토의 지역대표를 선정하는 등 전국 조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김재준 목사의 사퇴와 내부 분열로 지속되지 못했다.

민건, 민통, 민협, 민축 등 여러 이름의 조직들과 구국향군(고세근), 남가주국민회의(차상달) 등을 통합 내지는 연합 조직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넓은 지역과 인맥, 계보의 갈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1977년에 와서 독재정권의 장기화에 따른 해외운동 연합의 필요성이 드러나자 미주 전국의 연합운동체가 결성되게 되었다. 1977년 1월 14~16일 로스앤젤레스에 주요 운동단체 대표들 30여 명이 모여 ‘북미 한국민주화연합운동’(The United Movement for Democracy in Korea)을 조직했다. 통칭 ‘연합운동’(UM)으로 불린 이 운동은 조직보다는 운동의 연대에 중점을 두자며 회장이나 대표자 없이 7인의 집행위원을 선정했다. 김재준, 한승인, 차상달, 김상돈, 전규홍, 선우학원, 이재현 등이었다. 민건, 민통, 국민회의 등이 포괄되었지만 좌파로 알려진 민협 측은 가담하지 않았다.

결국 북미주의 민주화운동은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연합운동’(UM)과 림창영 박사를 중심한 소수의 ‘민협’ 두 갈래로 나뉘진다. 일본과 미주의 두 가지 흐름은 결국 독일 민주화운동의 분화에도 큰 영

향을 주었다.

기독자 민주동지회의 국내 지원과 로비활동

1975년 11월 제네바 회의를 통해 결성된 ‘한국민주사회건설 세계협의회’는 의장 김재준 목사께서 12월에 뉴코리아 타임스(캐나다)와 신한민보(로스앤젤레스, 김운하 발행)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는 세계조직이 완결되기까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해외 신문들이 보도해 버림으로 오히려 세계민간의 조직은 어렵게 되었다. 제네바 회의의 후속 책임을 진 박상중, 손명걸, 이삼열 등은 서신교환을 통해 해외 운동의 통합조직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연대조직을 만들기 위해 2차 시카고 모임을 조직했다. 1975년 5월 3~5일 시카고의 맥코맥 신학교에서 제네바 회의 후속 모임이 열렸다. 참석자는 김재준, 이상철(캐나다), 이승만, 손명걸, 구춘희, 선우학원, 홍동근, 차현희, 동원모, 이신행, 김상호(미국), 지명관(일본), 이삼열(독일), 박상중(스위스) 등 14명이었다.

그 동안의 각 지역 보고와 함께 연합운동의 전략이 장시간 논의되었는데, 중요한 결정은 제네바 회의에서 결정한 연합조직 이름을 영문(World Council for Democracy in Korea)은 그대로 쓰되 한국어명 이름은 ‘한국민주사회건설 세계협의회’가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 세계협의회’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민건회가 아닌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위해서 폭넓

은 ‘민주화운동’ 개념을 쓰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조직의 목적은 국내외의 민주화운동을 연결시키며 지원하는 조정기관(Coordinating body)으로서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단체들(local body)에 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봉사(serve)하며 국내외와 연결시키는(facilitate)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해외운동들을 연계(network)시키는 일을 주 임무로 삼기로 했다. 해외운동조직들의 연합이나 통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시 뽑은 임원은 김재준(회장), 지명관(부회장), 국내 1인 지명(부회장), 이승만(사무총장), 박상중(대변인), 손명걸(회계)이었으며, 회원들은 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선우학원), 재정위원회(손명걸), 행동조정위원회(오재식) 등 세 위원회에 모두 나누어 활동하도록 했다. 시카고 회의록은 거창한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을 나열했지만, 실제로 전담기구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내외의 운동들을 연계 조정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마침 1977년 10월 26~28일에 뉴욕의 스톤포인트(Stony Point)에서 한미교회협의회가 열리게 되어 국내에서 김관석 목사와 강문규 총무가 미국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해외 기독교 민주 운동자들이 다시 모여 국내외를 연결하는 전략 모임을 열기로 했다. 제네바(1975), 시카고(1976) 모임에 이은 3차 뉴욕(1977) 모임이었다. 한미교회협의회에 앞서 10월 22~25일에 뉴욕 교회 시버리 하우스(Seabury House)에서 모였는데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관석, 강문규(국내), 김재준, 이상철(캐나다), 이승만, 림순만, 손명걸, 박상중, 선우학원, 구춘회, 김상호(미국), 이인하, 지명관, 오재식, 김용복

(일본), 장성환, 이삼열(독일)이었다. 1977년 3차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시금 명칭을 개정해 ‘한국 민주화운동 세계협의회(WOCODEK)’에서 ‘국제기독교자 민주동지회(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Democracy in Korea)’로 바꾼 것이다. ‘세계협의회’라는 거창한 이름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기독교자 민주동지들 간의 유대와 결속, 전략협의를 신속한 국내지원이 시급하며, 네트워크 체제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재준 목사를 대표로 『민주동지』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독교자 민주동지회’의 1977~1982년간의 활동과 업적은 보다 자세히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한국 민주화에 끼친 중요한 공헌은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독일교회를 움직여 국내 인권운동과 구속자들을 돕는 데 수많은 선교자금이 쓰이도록 한 것과, 미국 정부에 반독재, 인권 로비를 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장로교, 감리교 등을 움직여서 ‘북미주 한국인권연합(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를 결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미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의 인권탄압 상황을 계속해 보고했으며, 미국 의회가 (Fraser 위원회 등)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사무국장으로는 미국 감리교 목사 페리스 하비(Pharis Harvey)와 김상호 목사가 수고했다. 나는 클라인(Klein) 목사를 통해 독일교회 개발협조처에 민주동지 발행과 인권자금을 신청했고, 2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미국교회(NCC) 에드라이든(Edwin Luidens) 총무에게 보냈다.

1978년 11월 13~15일에 뉴욕 근처 워윅(Warwick)에서 기독교자 민주동지들의 연차 모임이 있었고, 여기서 카터 대통령 방한에 원칙적 반대운

등을 펴면서, 김대중, 김지하, 문익환, 박형규의 석방과 인권 회복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하도록 결의했다. 1979년의 연차 회의는 일본 동경에서 갖기로 했는데, 마침 박 대통령 암살로 11월 22~25일 동경 교외 하코네 온천에서 모이게 되어 유신체제 사망에 따른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강문규 총무가 참석해 안개 정국을 분석 보고했다. “군부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며, 민주회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기독교 민주동지회 이름으로 발표했고(10월 29일),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요약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민주화운동의 정치화와 다원화가 가져올 운동의 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고려하면서, 특히 교회와 정치의 중간무대에서 크리스천의 소명의식에 따라 행동하여 온 기독교 민주동지들은 어떤 정치적 인물이나 정파의 선택에 앞서 민주화를 향한 공정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의 확립에 매진할 것이며, 자유와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참된 안정과 민주화, 그리고 올바른 경제발전과 평화통일의 개념을 밝혀서 시대적 양심과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는 예언자적 사명에 충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 특히 국가의 안정과 민주화에 필수적 함수관계에 있는 민족통일 과업을 위해 기독교로서의 사명과 기여를 다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1979년 11월 25일 기독교 민주동지회 5차 모임 결의문 4항)

그러나 정국은 민주화의 반대 방향으로 흘렀고 1980년 광주 학살과

전두환 장군의 5공화국 수립으로 더욱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독교자 민주동지회는 1981년 4월 28일~5월 1일 독일의 반볼(BadBall) 아카데미에서 다시 모여 WCC와 독일교회의 지원으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어 5공체제하의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방향 설정에 관해 진지한 토론과 결의를 했다.

한민련과 한민건의 분립

1977년도에 와서 해외 민주화운동은 기독교자 민주동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계통의 운동과 일본 한민통을 중심으로 하는 비기독교 진보 계통의 운동으로 흐름이 나뉘고 이원화한다. 유감스럽지만 독일의 우리 민건회에도 둘로 나뉘는 분화 과정이 오게 되었다.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또한 일부 회원들의 탈퇴와 제명은 있었지만, 민건회는 연합전선의 큰 흐름을 유지해 왔었는데, 1977년 8월 동경의 한민통이 주도해 조직한 '민주민족통일 해외 한국인연합(속칭 한민련)'의 출범이 분립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한민통과 연대하는 해외의 단체들을 묶어 조직된 한민련 창립 총회에 민건회는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윤이상, 이영빈, 김길순을 대표로 파견했다. 문제는 한민련 유럽지부의 조직에 민건회가 이제까지 이념과 노선의 문제로 제외시켰던 '남북사회연구회(소위 주체 그룹)'와 노동자연맹(노련)을 같은 단위로 참가시키는 데 있었다. 특히 한민련 구주본

부는 민건회와 주체 그룹, 노련 그룹, 재불 자주통일 협의회 등 4개 조직이 각기 한 표씩의 대표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짜였으며, 소속 단체는 한민련의 결정에 따르도록 조직되었다.

민건회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익명으로 글을 써내는 주체 그룹은 회원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민건회와 동일 자격으로 가입 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새로 민건 회장이 된 이영빈 목사는(윤이상 씨는 한민련 구주의장이 됨)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결국 기독교 측 민건회원들이 크게 반발했고, 주체그룹의 반기독교적 논설과 계급투쟁론을 문제 삼으며, 함께 한민련 조직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항의했다. 나는 장성환, 이준모, 이정의, 정참중, 천명윤 등 기독교 민주동지 20여 명과 함께 민건회 중앙위원회에 항의문(1977년 12월 30일)과 공개서한(1978년 3월 24일)을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민련에 가입한 민건회에서 분립된 ‘한국 민주사회건설 재독 협의회(AG Demokratische Gesellschaft Korea)’ 약칭 한민건을 창립하게 되었다.

진보적 유학생과 반공적 기독교인들을 연합시켜 민주사회건설 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던 나로서는 이 딜레마 앞에서 무척 고통스러웠다. ‘기독교 민주동지회’의 선배들은 한민통이나 한민련과의 거리를 두지 않는 한 국내 민주 진영의 보호를 위해 독일 민건회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강돈구, 이준모와 여러 차례 회합한 뒤 분립을 결심했다. 강돈구는 민건회에 남아 급진화(radicalize) 경향을 막고, 이준모와 나는 민건회를 떠나 한민건을 새로 조직해 기독교 민주동지회의 독일 파트너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한민건의 독일 이름을 AG(Arbeitsgemeinschaft)로 해서 워킹 그룹 형태로 만들었고, 독일 안에서의 대 사회활동은 민건회와 함께해 가도록 했다. 조직은 분립했지만 구명운동이나 세미나 집회활동에는 서로 왕래하며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건회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분립 공개서한(1978년 3월 24일)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이 분화의 계기가 한민련이나 민건회에 깊은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줄 것을 바라며 민주화운동단체들이 서로 적대시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노선이나 운동방향에 관해 건설적으로 비판하며 충고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논쟁할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소속과 조직은 달랐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조국의 민주화를 갈구하는 동지들이기에 공동의 토론과 행동의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충언과 격려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민건회와 한민건의 분립은 민주화운동의 분열로 보이기도 했으나, 운동의 전략과 노선의 차이와 갈등에 따른 불가피한 분화였다고 생각된다.

한민건 동지들은 1978년 5월 26일 보름 시에 모여 분립총회를 열고 현장을 채택한 뒤 이정의를 대표위원으로 정참종을 총무위원, 이삼열을 연구위원, 이준모를 편집위원으로 선출했다. 1978년 7월 28일엔 부퍼탈에서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세미나를 열어 김창락, 이준모, 이삼열, 림순

만 등이 인권운동 개념과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연구토론의 마당을 열었다. 많은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참여해 국내 인권현실에 관한 문제 의식을 심화했다. 발표내용들은 기관지 『민주사회』 창간호(1979년 1월)에 실었다.

1979년 3월 1일엔 마침 독일에 체류중인 안병무 교수를 모시고 삼일운동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좌담회를 열어 국내 민주화운동의 현안을 들으며 토론했다. 3월 13~16일엔 안병무 박사의 요청으로 독일과 미주의 기독교 민주동지들 40여 명이 도르프바일 타우누스(Dorfweil Taunus)에 모여 박 정권 후의 민주체제(Post Park) 문제에 관해 연구 모임을 가지며 새로운 이념과 경제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1979년 8월 25일엔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들의 구속 고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두 번 방문한 동·서 베를린 교회 샤프(Kurt Scharf) 감독을 초청해 보콤포에서 “독재국가와 고백교회: 독일과 한국에서의 경험들”이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는데 독일 교인들도 많이 참석해 방청했다.

이렇게 한민건과 한민련이 따로 분립해 자기 성격에 맞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을 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유신독재는 종말을 고했다. 1980년 광주 민중학살 사태와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 수립으로 다시금 군부 독재체제가 연장되었을 때 독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동지들은 선택의 길이 갈라지게 된다. 민주화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군부독재 체제가 강화된 한국 땅으로 들어가서 국내운동에 가담할 것이냐, 해외에 남아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지속할 것이냐의 운명을 가르는 고민이 생겼다. 체류와 직장이 안정된 동지들은

독일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나처럼 유학생으로 왔다가 학위를 마치고도 귀국을 할 수 없었던 동지들은 귀국할 길만 열린다면 영주할 수 없는 독일 땅을 떠나야만 했다. 1982년에 내가 먼저 귀국해 송실대 교수로 취임하게 되자 강돈구, 이준모, 송영배, 양재혁, 최두환 등 10여명 이상의 동지들이 귀국해서 국내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독일에 남은 동지들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계속하였지만, 진보적 통일운동을 하기 시작한 일부의 동지들은 이영빈, 이화선, 윤이상, 송두을, 김종한, 이지숙처럼 북한을 왕래하며 북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창균, 오길남 등과 같이 아예 가족을 데리고 북한으로 망명한 사람도 생겼다. 5공 독재에 절망하여 북한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겠다는 희망을 두고 결행한 것 같다.

독일에서 10여 년간 민주화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들이 이렇게 갈라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에 기여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하리라고 믿는다. 방법과 전략이 다르더라도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선택을 존중하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지내왔다. 어떤 선택의 길이 더 현명하며 효과적인 길이었는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훗날 분단이 극복되고, 조국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의 공헌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 ~~XXXX~~